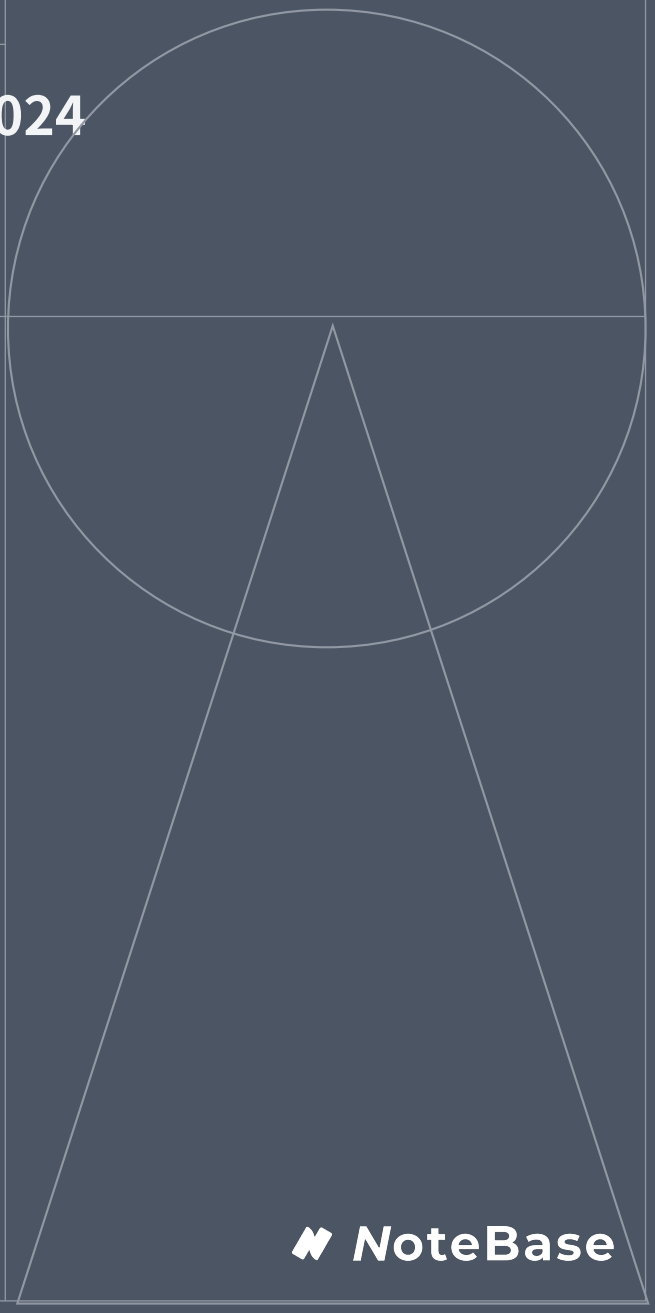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재정학 · 2024



NoteBas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재정학 · 2024

전문직/세무사 · 재정학 · 2024

문 1. 바람직한 조세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는 공평성의 원칙

② 조세를 통한 재정수입을 극대화하는 수입성의 원칙

③ 조세의 납부방법, 시기, 금액 등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는 확실성의 원칙

④ 조세의 납부방법이 납세자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편의성의 원칙

⑤ 조세징수와 관련된 비용과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주는 부담이 가장 적은 경제성의 원칙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바람직한 조세의 원칙인 공평성·확실성·편의성·경제성의 의미를 구별하고, 조세수입의 극대화가 그 원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평성은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맞게 조세부담을 배분하는 원칙이다. 확실성은 납부할 세액·시기·방법을 명확하게 정하는 원칙이다. 편의성은 납세자가 납부하기 편리하도록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원칙이다. 경제성은 징세비용과 조세가 민간 경제활동에 주는 불필요한 부담을 작게 하는 원칙이다. 조세는 필요한 재원을 적절히 확보해야 하지만, 재정수입 자체를 최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세의 원칙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은 부담능력이 큰 사람이 더 부담하도록 하는 공평성의 원칙에 부합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재정수입을 극대화'이다. 조세는 필요한 재원을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국민의 조세부담과 경제적 왜곡을 무시한 채 수입을 최대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세의 원칙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필요한 재정수입을 적정하게 확보한다'고 표현한다.
③ O — 납부방법·시기·금액을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하는 것은 확실성의 원칙이다.
④ O — 납세자에게 편리한 납부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편의성의 원칙이다.
⑤ O — 조세징수비용과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생기는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경제성의 원칙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재정수입'이라는 말만 보고 조세의 당연한 기능으로 판단하기 쉽다. 함정은 '극대화'에 있다. 필요한 재원의 적정한 확보와 조세수입의 무조건적 극대화는 서로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핵심어를 먼저 확인한다. 부담의 공정한 배분은 공평성, 세액·시기·방법의 명확성은 확실성, 납부하기 쉬운 방식은 편의성, 징세비용과 경제적 부담의 최소화는 경제성으로 판단한다. '수입 극대화'처럼 다른 가치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절대적 표현은 이 네 원칙과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좋은 조세의 네 기준은 공평하게, 확실하게, 편리하게, 적은 비용으로이다. 수입은 적정 확보이지 무조건적 극대화가 아니다.

NoteBase

문 2. 조세의 공평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누진세의 도입은 2개 과세기간 이상의 평균소득이 동일한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② 편익원칙에 따를 때, 누진세를 도입하는 경우 편익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공평하다.

③ 납세 전후로 개인 간 효용수준의 순위가 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수평적 공평성의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포괄적 소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⑤ 소득세율의 누진성 강화는 납세자들 간의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하게 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 편익원칙, 효용순위 불변 원칙이 조세제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평적 공평성: 경제적 능력이 같은 사람은 같은 세 부담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직적 공평성: 경제적 능력이 다른 사람은 그 차이에 맞게 다른 세 부담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편익원칙: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서 얻는 편익에 따라 세 부담을 배분하는 원칙이다.
효용순위 불변: 과세 때문에 개인 간 효용수준의 순위가 뒤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누진세율 아래에서는 소득이 해마다 크게 변동하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이 비교적 일정한 근로소득자보다 여러 과세기간의 평균소득이 같아도 총세액을 더 부담할 수 있다. 같은 평균소득에 서로 다른 세 부담이 생기므로 수평적 공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
② X. 틀린 표현은 '편익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이다. 편익원칙에 따라 누진세를 정당화하려면 소득이 증가할 때 편익도 소득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하여 편익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커야 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효용수준의 순위가 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다. 공평한 과세는 납세 전후 개인 간 효용수준의 순위가 바뀌지 않는 효용순위 불변을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X. 틀린 표현은 '포괄적 소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이다. 포괄적 소득세는 소득의 원천과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같은 총소득에 같은 세 부담을 지우므로 수평적 공평성 개선에 바람직하다.
⑤ X. 틀린 표현은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하게 된다'이다. 소득세율의 누진성을 강화하면 담세력이 큰 납세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세 부담을 지우므로 일반적으로 수직적 공평성이 강화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에서는 한 과세기간의 소득이 아니라 여러 기간의 평균소득이 같다는 점이 함정이다. 누진세는 소득 변동성이 큰 사람에게 더 큰 기간 합계 세액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②의 탄력성 방향, ③의 효용순위 변화 여부, ④·⑤의 공평성 개선 방향을 반대로 바꾼 표현에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같은 경제력에 같은 부담인지는 수평적 공평성,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부담이 커지는지는 수직적 공평성으로 판단한다. 누진세와 소득 변동이 함께 나오면 기간별 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총세액을 비교하고, 편익원칙에서는 세 부담의 증가 정도와 편익의 증가 정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같은 능력에는 같은 세금이 수평적 공평성이고, 더 큰 능력에는 더 큰 세금이 수직적 공평성이다. 누진세와 소득 변동이 결합하면 같은 평균소득이라도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NoteBase

문 3.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② 세율이 높아지면 초과부담이 늘어나고 조세수입도 늘어난다.

③ 정액세(lump-sum tax) 부과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④ 완전보완재인 두 재화 중 한 재화에 대한 과세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⑤ 초과부담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보상수요곡선을 이용해야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조세가 납세자의 선택을 왜곡할 때 생기는 초과부담과 세율·탄력성·조세수입의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초과부담은 조세로 인해 거래나 소비 선택이 왜곡되어, 정부가 얻는 조세수입을 넘어 추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손실이다. 수요나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과세에 따른 수량 변화가 커져 초과부담이 커지며, 표준적인 근사에서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한다. 반면 조세수입은 세율과 과세 후 거래량의 곱이므로 세율과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세금으로 인한 수요량 감소와 거래 축소가 커지므로 초과부담이 커진다.
② X — 틀린 부분은 '세율이 높아지면 조세수입도 늘어난다'이다. 세율 상승은 초과부담을 크게 하지만, 조세수입은 세율과 과세표준의 곱이므로 과세표준이 충분히 줄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올바르게는 '세율이 높아지면 초과부담은 늘어나지만 조세수입이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이다.
③ O — 정액세는 행동이나 거래량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부과하므로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고 대체효과를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선택 왜곡에 따른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O — 완전보완재는 일정한 비율로 함께 소비하므로 한 재화의 상대가격이 상승해도 두 재화 사이의 대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한 재화에 대한 과세는 소비 묶음의 가격을 높이는 효과만 내므로 대체효과에 따른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O — 보상수요곡선은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를 나타내므로 조세가 만드는 순수한 왜곡과 후생손실을 정확히 측정하는 데 이용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세율 상승 → 세수 증가'라고 단정한 것이 함정이다. 세율이 오르면 세율 자체는 커지지만 과세 대상 거래량은 줄 수 있으므로, 초과부담의 증가와 조세수입의 증가는 별개의 판단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조세가 상대가격을 바꾸어 대체효과를 만드는지 확인한다. 대체효과가 크면 초과부담도 크고, 정액세나 완전보완재처럼 대체효과가 없으면 초과부담도 없다. 세수는 반드시 '세율 × 과세표준'으로 보아 단조 증가 여부를 따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탄력성·세율이 커지면 초과부담은 커진다. 그러나 세율이 커져도 세수가 반드시 커지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4. 단위당 일정액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정부의 조세 수입은 증가한다.

②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조세부과에 따른 후생손실은 커진다.

③ 단위당 세액이 커지면 정부의 조세수입은 증가한다.

④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⑤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 생산자가 조세 전부를 부담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단위당 물품세가 거래량, 조세수입, 후생손실 및 수요자·공급자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탄력성과 연결하여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세의 귀착은 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쪽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으로 결정된다.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한 비탄력적인 쪽은 거래를 줄이거나 시장을 벗어나기 어려워 더 큰 조세부담을 진다.
단위당 세액을 t, 과세 후 거래량을 Q_t라 하면 조세수입은 $T = tQ_t$이다. 조세로 감소한 거래량이 클수록 후생손실이 커지므로,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수요나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후생손실이 커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정부의 조세 수입은 증가한다'이다. 단위당 세액이 같을 때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과세에 따른 거래량 감소가 커져 과세 후 거래량 Q_t가 작아지므로 조세수입 tQ_t는 감소한다. 올바르게는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거래량 감소가 작아 조세수입이 커진다고 표현한다.

② O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세금으로 인한 가격 왜곡에 대해 공급량이 더 크게 줄어 거래량 감소가 커진다. 후생손실은 세액과 감소한 거래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후생손실이 커진다.

③ X
틀린 표현은 '단위당 세액이 커지면 정부의 조세수입은 증가한다'라고 단정한 부분이다. 세액이 커지면 단위당 수입은 늘지만 거래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총조세수입 tQ_t가 반드시 증가하지는 않으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올바르게는 단위당 세액 인상이 조세수입을 반드시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표현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이다. 탄력성이 높은 쪽은 가격 변화에 대응하여 거래를 더 쉽게 줄일 수 있으므로 조세부담을 상대방에게 더 많이 전가한다. 올바르게는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낮은 쪽의 조세부담이 더 커진다고 표현한다.

⑤ X
틀린 표현은 '생산자가 조세 전부를 부담한다'이다.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 소비자는 가격이 상승해도 수요량을 줄이지 않으므로 세금 전액이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전가된다. 올바르게는 소비자가 조세 전부를 부담한다고 표현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생산자가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 탄력성이 높으면 그쪽의 조세부담은 작아지지만 거래량 반응은 커지므로 후생손실은 커진다. 조세부담의 크기와 후생손실의 크기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세귀착은 '더 비탄력적인 쪽이 더 부담한다'로 판단한다. 후생손실은 '수요나 공급이 더 탄력적일수록 거래량 감소가 커져 후생손실도 커진다'로 판단한다. 조세수입은 세액만 보지 않고 반드시 세액과 과세 후 거래량의 곱 tQ_t을 함께 본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부담은 비탄력적인 쪽, 후생손실은 탄력적일수록 크게 나타난다. 세액 상승이 조세수입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NoteBase

문 5. 커피우유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Q_d = 50 - 2P$, $Q_s = 3P - 20$이다. 정부가 단위당 1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세 총액은 120원이다.

② 물품세 부과 전 균형가격은 14원, 균형거래량은 22이다.

③ 물품세 부과 이후 균형가격은 20원, 균형거래량은 10이다.

④ 소비자와 생산자 조세부담은 각각 단위당 6원과 4원이다.

⑤ 사회적 후생손실은 60원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생산자에게 단위세를 부과했을 때 소비자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의 차이가 세액만큼 벌어진다는 조건을 이용하여 새로운 균형, 조세수입, 조세부담 및 사회적 후생손실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수요함수는 $Q_d = 50 - 2P$, 공급함수는 $Q_s = 3P - 20$이다. 세금 부과 전에는 하나의 균형가격을 사용한다. 생산자에게 단위당 10원의 세금을 부과한 뒤에는 소비자가격을 P_c, 생산자 수취가격을 P_p라 할 때 $P_c = P_p + 10$이다.

사용할 공식

균형조건은 $Q_d = Q_s$이다. 단위세를 t, 세후 거래량을 Q_1이라 하면 조세수입은 $R = tQ_1$이다. 소비자의 단위당 부담은 $P_c - P_0$, 생산자의 단위당 부담은 $P_0 - P_p$이다. 선형 수요·공급에서 사회적 후생손실은 $DWL = \frac{1}{2}t(Q_0 - Q_1)$이다. 단위세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 사이에 쐐기를 만들기 때문에 이 공식들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세금 부과 전: $50 - 2P = 3P - 20$이므로 $P_0 = 14$, $Q_0 = 22$이다.
2. 세금 부과 후: $P_p = P_c - 10$이므로 공급량은 $Q_s = 3(P_c - 10) - 20 = 3P_c - 50$이다.
$50 - 2P_c = 3P_c - 50$에서 $P_c = 20$, $Q_1 = 10$이고, $P_p = 10$이다.
3. 조세수입은 $10 \times 10 = 100$원이다. 소비자의 단위당 부담은 $20 - 14 = 6$원, 생산자의 단위당 부담은 $14 - 10 = 4$원이다.
4. 거래량 감소분은 $22 - 10 = 12$이므로 사회적 후생손실은 $\frac{1}{2} \times 10 \times 12 = 6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물품세 총액은 단위당 세액 10원에 세후 거래량 10을 곱한 100원이다. ‘120원’이 아니라 ‘100원’이므로 틀린 선지이다.
② O. 세전 균형조건 $50 - 2P = 3P - 20$을 풀면 균형가격은 14원, 균형거래량은 22이다.
③ O. 세후에는 $P_c - P_p = 10$이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야 하므로 소비자가격은 20원, 균형거래량은 10이다.
④ O. 소비자가격은 14원에서 20원으로 올라 소비자가 단위당 6원을 부담하고, 생산자 수취가격은 14원에서 10원으로 내려 생산자가 단위당 4원을 부담한다. 두 부담의 합은 단위세 10원이다.
⑤ O. 세금으로 거래량이 22에서 10으로 12만큼 줄어들므로 사회적 후생손실은 $\frac{1}{2} \times 10 \times 12 = 60$원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120원은 단위세 10원에 거래량 감소분 12를 곱한 값이다. 조세수입에는 감소분이 아니라 실제 세후 거래량 10을 곱해야 한다. 반면 거래량 감소분 12는 사회적 후생손실을 계산할 때 사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위세 문제는 먼저 세전 균형을 구하고, 세후에는 소비자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의 차이를 단위세와 같게 둔 뒤 새 균형을 구한다. 이후 조세수입은 ‘세율 × 세후 거래량’, 후생손실은 ‘1/2 × 세율 × 거래량 감소분’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세수는 세후 거래량을 곱하고, 후생손실은 거래량 감소분을 곱한다. 소비자 부담과 생산자 부담의 합은 단위세와 같다.

NoteBase

문 6. 조세부과 시 납세자들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평가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ㄱ. 능력원칙
ㄴ. 중립성 원칙
ㄷ. 효율성 원칙
ㄹ. 편익원칙
ㅁ. 최소징세비 원칙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ㄷ, ㅁ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판단하는 원칙과 조세의 효율성·징세비용에 관한 원칙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능력원칙: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공평성 원칙이다.
편익원칙: 정부의 공공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에 따라 세금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공평성 원칙이다.
중립성 원칙과 효율성 원칙은 조세가 경제주체의 선택과 자원배분을 되도록 적게 왜곡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최소징세비 원칙은 조세의 부과·징수에 드는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의 능력원칙은 공평성 기준이지만, ㄴ의 중립성 원칙은 조세로 인한 경제적 의사결정의 왜곡을 줄이려는 기준이다. 틀린 부분은 'ㄴ'이며, 공평성 기준의 조합은 'ㄱ, ㄹ'이다.
② O — ㄱ의 능력원칙은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을, ㄹ의 편익원칙은 공공서비스의 편익에 따른 공평을 평가하므로 두 항목 모두 조세부담의 공평성 기준이다.
③ X — ㄴ의 중립성 원칙과 ㄷ의 효율성 원칙은 모두 조세가 경제행위와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정도에 관한 기준이다. 'ㄴ, ㄷ'이 아니라 공평성 기준인 'ㄱ, ㄹ'이 옳다.
④ X — ㄴ은 경제적 중립성, ㅁ은 징세비용의 최소화에 관한 원칙이므로 공평한 조세부담의 평가기준이 아니다. 'ㄴ, ㅁ'은 'ㄱ, ㄹ'로 고쳐야 한다.
⑤ X — ㄷ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ㅁ은 조세 부과·징수 비용의 최소화에 관한 원칙이다. 'ㄷ, ㅁ'이 아니라 공평성 기준인 'ㄱ, ㄹ'이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좋은 조세가 갖추어야 할 원칙’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중립성·효율성·최소징세비 원칙까지 공평성 기준으로 오인하기 쉽다. 이 문항은 조세원칙 전반이 아니라 납세자 사이의 부담 배분이 공평한지를 묻고 있으므로 능력과 편익만 골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공평한지를 묻는 경우에는 부담능력과 수혜편익을 확인한다. 경제적 선택의 왜곡을 묻는 경우에는 중립성·효율성, 세금을 걷는 비용을 묻는 경우에는 최소징세비 원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공평성은 능력과 편익, 경제적 왜곡은 중립성과 효율성, 징수비용은 최소징세비이다.

NoteBase

문 7.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본이득방식(capital gains method) - 법인세를 폐지하고 실현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자본이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분통합에 해당된다.
ㄴ. 조합방식(partnership method) - 배당이나 사내유보를 구분하지 않고 법인의 이윤을 모두 주주에게 귀속시켜 개인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전통합에 해당된다.
ㄷ. 배당세액공제제도(dividend gross-up method) - 법인의 모든 이윤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다음, 법인세 중 배당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완전통합에 해당된다.
ㄹ. 차등세율제도(split rate system) - 법인의 이윤 중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내유보가 되는 부분보다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주는 방식으로 부분통합에 해당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법인 단계와 주주 단계의 이중과세를 없애는 범위에 따라 완전통합과 부분통합을 구분하고, 각 통합방식의 과세 구조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완전통합은 법인의 이윤 전체를 주주 단계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하나의 체계로 합치는 방식이다. 조합방식과 자본이득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부분통합은 법인세를 유지하면서 배당 부분 등에 대해서만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배당세액공제제도와 차등세율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자본이득방식은 법인세를 폐지하고 사내유보로 생긴 주식가치 증가분까지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의 자본이득으로 과세한다. 조합방식은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이윤 전부를 주주에게 귀속시켜 과세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ㄴ은 옳지만 ㄱ의 '부분통합'이 틀렸다. 자본이득방식은 법인세를 폐지하고 모든 자본이득을 주주 단계에서 과세하므로 완전통합에 해당한다. 또한 옳은 ㄹ이 빠져 있다. 따라서 옳은 진술의 조합은 'ㄴ, ㄹ'이다.
② X — ㄱ과 ㄷ이 모두 틀렸다. ㄱ의 자본이득방식은 부분통합이 아니라 완전통합이고, ㄷ의 배당세액공제제도는 완전통합이 아니라 배당 부분의 이중과세만 조정하는 부분통합이다. 따라서 옳은 진술의 조합은 'ㄴ, ㄹ'이다.
③ X — ㄴ은 옳지만 ㄷ의 '완전통합'이 틀렸다.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법인세를 유지한 채 배당에 대응하는 법인세를 주주의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하므로 부분통합이다. 또한 옳은 ㄹ이 빠져 있다. 따라서 옳은 진술의 조합은 'ㄴ, ㄹ'이다.
④ O — 조합방식은 법인의 모든 이윤을 주주에게 귀속시키는 완전통합이고, 차등세율제도는 배당분에 유보분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부분통합이다. 따라서 ㄴ과 ㄹ이 모두 옳다.
⑤ X — ㄴ과 ㄹ은 옳지만 ㄷ의 '완전통합'이 틀렸다.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법인세 중 배당에 대응하는 부분만 주주 단계에서 공제하는 부분통합이다. 따라서 ㄷ을 제외한 'ㄴ, ㄹ'이 옳다.

오답 포인트

법인세를 폐지하여 법인의 이윤 전체를 주주 단계에서 과세하는 자본이득방식과, 법인세를 유지하면서 배당 부분만 조정하는 배당세액공제제도의 통합 범위를 뒤바꾼 ㄱ·ㄷ이 함정이다.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라는 표현은 자본이득방식의 내용에는 맞지만 이를 부분통합으로 분류한 부분이 틀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법인세를 없애거나 법인의 이윤 전부를 주주에게 귀속시키는지를 확인한다. 그러면 완전통합이다. 법인세를 유지한 채 배당분의 세액공제나 세율 인하만 인정하면 부분통합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ㄱ은 X, ㄴ은 O, ㄷ은 X, ㄹ은 O가 된다.

암기 포인트

이윤 전체를 합치면 완전통합: 조합·자본이득. 배당 부분만 조정하면 부분통합: 배당세액공제·차등세율.

NoteBase

문 8.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재소비가 정상재인 경우에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의한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줄어들게 한다.

② 비례소득세는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을 향상시킨다.

③ 선형누진세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평균세율은 올라가지만 한계세율은 변화하지 않는다.

④ 소득공제는 조세의 부담에 있어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유리하다.

⑤ 세액공제의 도입은 한계세율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자소득세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비례세와 선형누진세의 세율 구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귀착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례소득세는 모든 소득수준에 같은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을 적용한다. 선형누진세는 일정한 한계세율에 기초공제 또는 정액공제를 결합하여 소득이 늘수록 평균세율이 상승하도록 만든 세제이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공제액을 빼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직접 뺀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줄어들게 한다'이다. 이자소득세로 세후 이자율이 낮아지면 저축자는 실질적으로 가난해진다. 현재소비가 정상재이면 소득효과에 따라 현재소비를 줄이므로 저축은 늘어난다. 저축을 줄이는 것은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낮아져 현재소비를 늘리는 대체효과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수직적 공평성을 향상시킨다'이다. 비례소득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평균세율을 적용하므로 세전소득의 상대적 분포를 바꾸지 않는다. 수직적 공평성을 높이는 대표적 방식은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세율이 상승하는 누진소득세이다.

③ O — 선형누진세를 $T(Y) = tY - F$, $t > 0$, $F > 0$로 나타내면 한계세율은 $dT/dY = t$로 일정하다. 평균세율은 $T(Y)/Y = t - F/Y$이므로 소득 Y가 증가할수록 상승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유리하다'이다.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하면 절세액은 대체로 '공제액 × 한계세율'이므로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이 더 큰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정률적인 소득공제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⑤ X — 틀린 표현은 '한계세율의 증가를 초래한다'이다. 일정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정액을 차감하므로 세부담의 수준은 낮추지만 소득 1원 증가에 따른 추가 세액인 한계세율은 바꾸지 않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에서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방향을 뒤바꾼 점, ③에서는 평균세율의 상승을 한계세율의 상승으로 오인하기 쉬운 점이 핵심 함정이다. 또한 ④의 소득공제와 ⑤의 세액공제를 모두 단순한 감세로만 보면 계층별 혜택과 한계세율 효과를 구별하기 어렵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율 문항은 먼저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을 분리한다. 공제 문항은 '과세표준에서 차감'이면 소득공제, '산출세액에서 차감'이면 세액공제로 구별한다. 이자소득세의 저축효과는 대체효과는 저축 감소, 현재소비가 정상재일 때 소득효과는 저축 증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선형누진세는 평균세율은 상승하고 한계세율은 일정하다. 소득공제는 고세율자에게 유리하고, 정액 세액공제는 한계세율을 바꾸지 않는다.

NoteBase

문 9. 우리나라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는 조세부담이 누진적이다.

② 수출품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국내 판매용 제품과 동일하다.

③ 기업의 부채비중을 높이는 것이 법인세 절감에 유리하다.

④ 기업이 자본재 구입 시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

⑤ 법인세는 법인의 자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의 부담 분포와 수출 영세율, 법인세의 과세대상·부채 조달·투자세액공제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세금의 명목상 납세자보다 실제 부담과 과세표준·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영세율 = 과세대상 거래이지만 세율을 0%로 적용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하는 제도이다.
투자세액공제 = 일정한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산출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빼 주는 제도이다.
부채의 조세방패 = 차입금 이자가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과세소득을 줄여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이다.

핵심 구분

부가가치세는 소비지출에 붙는 조세이므로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커져 일반적으로 역진적이다. 2024년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국내 과세 판매와 부담이 같지 않다. 법인세는 법인의 자산 자체가 아니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기초로 과세하며, 투자세액공제는 산출된 법인세에서 공제되어 세 부담을 낮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부가가치세는 같은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중 소비에 쓰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어 소득 대비 조세부담률이 커지는 역진성을 보인다.
틀린 표현: 조세부담이 누진적이다.
올바른 표현: 조세부담은 일반적으로 역진적이다.

② X
수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으로 10% 세율이 적용되는 국내 과세 판매용 제품과 부가가치세 부담이 동일하지 않다.
틀린 표현: 국내 판매용 제품과 동일하다.
올바른 표현: 수출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국내 과세 판매용 제품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다.

③ O
자기자본에 대한 배당은 법인세 계산상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부채에 대한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과세소득을 줄인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부채비중의 증가는 법인세 절감에 유리한 조세방패 효과를 낸다.

④ X
투자세액공제는 일정한 자본재 투자액의 일부를 산출된 법인세에서 빼는 제도이므로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킨다.
틀린 표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
올바른 표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법인세 부담이 감소한다.

⑤ X
법인세는 법인의 자산 보유액 자체가 아니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기초로 과세한다.
틀린 표현: 법인의 자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올바른 표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부채비중 증가’를 재무위험 증가 문제로만 보면 오답이 되기 쉽다. 이 선지는 다른 조건이 같은 표준적인 법인세 분석에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으로 생기는 조세방패만 묻는다. 또한 ②에서는 영세율을 면세와 혼동하지 않고, 수출 거래의 매출세율이 0%이면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잡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제도가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중 어느 단계에 영향을 주는지 구분한다. 이자비용은 과세소득을 줄이고, 투자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직접 줄이며, 수출 영세율은 매출세율을 0%로 만든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부가가치세는 역진적, 수출은 영세율, 부채이자는 조세방패, 투자세액공제는 세 부담 감소, 법인세는 소득과세이다.

NoteBase

문 10.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불확실성 하의 기대효용 극대화 관점에서 탈세 행위를 분석하고 있다.

② 납세자가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③ 세율 상승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발생시켜 탈루소득을 더 크게 만든다고 분석하였다.

④ 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감사의 확률이나 벌금률 조정을 탈세 방지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⑤ 행정비용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감사의 확률보다 벌금률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한 탈세방지 수단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알링햄-샌드모 모형에서 세율, 감사확률, 벌금률의 변화가 신고소득과 탈루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알링햄-샌드모 모형은 위험기피적인 납세자가 적발 여부라는 불확실성 아래에서 신고소득을 선택하여 기대효용을 극대화한다고 본다. 세율 상승은 탈세의 한계수익을 높이는 대체효과와 납세자의 순소득 감소로 위험부담을 줄이게 하는 소득효과를 함께 일으키므로 탈세에 미치는 순효과가 불확정적이다. 반면 감사확률이나 벌금률의 상승은 신고소득을 늘리고 탈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이 모형은 적발되지 않은 경우와 적발된 경우의 효용을 각각 고려하여 납세자가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신고소득을 선택한다고 분석한다.

② O. 비교정태 분석에서는 소득이 늘수록 절대위험기피도가 감소하는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가정을 사용한다. 이 가정 아래에서 세율 상승의 소득효과는 탈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발생시켜 탈루소득을 더 크게 만든다'이다. 세율 상승의 대체효과는 탈세를 늘리는 방향이지만 소득효과는 탈세를 줄이는 방향이므로, 두 효과가 반대로 작용하여 탈루소득의 변화 방향은 확정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세율 상승이 서로 반대 방향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발생시켜 탈루소득에 미치는 순효과는 불확정적이다'라고 해야 한다.

④ O. 세율이 탈세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정적이지만 감사확률과 벌금률의 상승은 탈세를 억제하는 방향이 분명하다. 따라서 세율 자체를 탈세 억제 수단으로 과도하게 이용하기보다 감사확률과 벌금률을 조정하는 접근이 타당하다.

⑤ O. 감사확률을 높이려면 조사 인력과 행정자원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벌금률은 직접 조정할 수 있다. 두 수단이 탈세 억제에서 대체관계라면 행정비용 측면에서는 감사확률보다 벌금률을 높이는 방안이 더 유리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에서 세율 상승의 대체효과만 보면 탈세가 늘어난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절대위험기피도 체감 아래의 소득효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세율의 총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책변수별 효과를 나누어 판단한다. 세율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충돌하므로 효과가 불확정적이고, 감사확률과 벌금률의 상승은 신고소득을 늘려 탈세를 감소시킨다.

암기 포인트

세율 효과는 불확정, 감사확률·벌금률 상승은 탈세 감소이다.

NoteBase

문 11. 우리나라 조세 중 목적세가 아닌 것은?

① 담배소비세

② 지방교육세

③ 지역자원시설세

④ 농어촌특별세

⑤ 교통·에너지·환경세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조세 수입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목적세와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보통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세수의 일부가 특정 분야에 이전되는지보다 해당 세목 자체가 법령상 보통세인지 목적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목적세는 세수를 특정 사업이나 지출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정해진 조세이다. 보통세는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조세이다.

핵심 구분

지방세기본법 제7조는 담배소비세를 보통세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목적세로 분류한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대중교통·에너지·환경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목적세이다. 따라서 다섯 세목 중 목적세가 아닌 것은 담배소비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담배소비세는 지방세기본법상 보통세이므로 목적세가 아닌 것을 묻는 정답 선지이다. 담배소비세 수입과 교육재정 사이에 연계가 있더라도 담배소비세 자체의 법적 분류가 목적세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② X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이다.
틀린 판단: 지방교육세를 목적세가 아닌 세목으로 보는 것
올바른 판단: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다.

③ X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보전, 환경 개선, 주민생활환경 개선, 지역개발 및 소방사무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이다.
틀린 판단: 지역자원시설세를 목적세가 아닌 세목으로 보는 것
올바른 판단: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이다.

④ X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이다.
틀린 판단: 농어촌특별세를 목적세가 아닌 세목으로 보는 것
올바른 판단: 농어촌특별세는 목적세이다.

⑤ X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에너지·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이다.
틀린 판단: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목적세가 아닌 세목으로 보는 것
올바른 판단: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이다.

오답 포인트

담배소비세 수입의 일부가 교육재정과 연결된다는 사실 때문에 담배소비세 자체를 목적세로 오인하기 쉽다. 세수의 이전·배분과 세목의 법적 분류는 구별해야 한다. 또한 세목 명칭에 '특별세'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법이 그 세수를 특정 사업의 재원으로 묶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지방세기본법상 지방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국세 중 특정 사업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묶는다. 남는 담배소비세는 보통세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지방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국가 목적세의 대표는 '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이고, 담배소비세는 보통세이다.

NoteBase

문 12. 시점간(inter-temporal) 소비선택 모형을 이용하여 이자소득세 부과가 개별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며, 미래소득은 영(0)이다. 그리고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모두 정상재이다.)

ㄱ. 미래소비로 표시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하락한다.
ㄴ. 대체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증가하므로 저축은 감소한다.
ㄷ. 소득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감소하고 미래소비도 감소한다.
ㄹ. 실질소득이 감소하므로 효용수준은 감소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자소득세가 세후 이자율을 낮출 때 현재소비의 상대가격, 대체효과, 소득효과 및 효용수준이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세후 총수익률을 $R = 1 + r(1 - t)$라고 하면 미래소득이 0일 때 예산선은 $c_2 = R(y_1 - c_1)$이다. 이자소득세 부과로 R이 하락하면 예산선은 현재소득만 전부 소비하는 점을 축으로 안쪽으로 회전한다.
ㄱ. O — 현재소비 1단위의 기회비용은 포기하는 미래소비 R단위이므로, R의 하락은 미래소비로 표시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 하락을 뜻한다.
ㄴ. O — 현재소비가 상대적으로 싸지므로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늘리고 미래소비와 저축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ㄷ. O — 세후 수익률 하락은 저축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킨다.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모두 정상재이므로 소득효과만 보면 두 소비가 모두 감소한다.
ㄹ. O — 세후 수익률 하락으로 저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소비 기회가 줄어 예산집합이 축소되므로 효용수준이 감소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 ㄴ, ㄷ은 옳지만 옳은 ㄹ을 빠뜨렸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ㄹ이다.
② X — ㄱ, ㄴ, ㄹ은 옳지만 옳은 ㄷ을 빠뜨렸다. 실질소득 감소의 소득효과는 정상재인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를 모두 감소시킨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ㄹ이다.
③ X — ㄱ, ㄷ, ㄹ은 옳지만 옳은 ㄴ을 빠뜨렸다. 대체효과는 상대적으로 싸진 현재소비를 늘려 저축을 감소시킨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ㄹ이다.
④ X — ㄴ, ㄷ, ㄹ은 옳지만 옳은 ㄱ을 빠뜨렸다. 세후 총수익률 하락은 미래소비로 표시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을 낮춘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ㄹ이다.
⑤ O —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으므로 옳은 설명을 빠짐없이 묶은 조합이다.

오답 포인트

ㄴ과 ㄷ이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증가시키지만,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는 정상재인 현재소비를 감소시킨다. 두 효과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최종적인 현재소비와 저축의 총변화는 크기 비교 없이는 확정할 수 없지만, 각 효과를 따로 서술한 ㄴ과 ㄷ은 모두 옳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이자소득세가 세후 총수익률을 낮추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 하락에 따른 대체효과를 판단하고, 예산집합 축소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와 정상재의 소득효과를 별도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합친 총효과는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가 주어졌을 때만 확정한다.

암기 포인트

이자소득세 부과 → 세후 수익률 하락 → 현재소비 상대가격 하락·대체효과상 현재소비 증가·정상재의 소득효과상 두 시점 소비 감소·효용 감소이다.

NoteBase

문 13. 하루 $\overline{T}(\overline{T} \leq 24)$시간을 노동(H)과 여가(L)에 배분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M, 시간당 임금률은 w이다. 세율 t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근로소득 이외의 여타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여가이고 세로축은 근로소득이다.)

① 세금 부과 전의 예산선은 $M = w(\overline{T} - L)$이다.

② 세금 부과 후 예산선의 세로축 절편은 $(1 - t)w\overline{T}$이다.

③ 여가가 정상재라면, 노동공급은 증가, 감소 또는 불변일 수 있다.

④ 여가가 정상재라면,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클 경우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⑤ 여가가 열등재라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근로소득세로 순임금이 하락할 때 여가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방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근로소득세 부과로 순임금은 $(1 - t)w$가 된다. 순임금 하락은 여가의 기회비용을 낮추므로 대체효과는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을 줄인다.
여가가 정상재이면 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는 여가를 줄이고 노동공급을 늘리므로 대체효과와 반대 방향이다.
여가가 열등재이면 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도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을 줄이므로 대체효과와 같은 방향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세전 근로소득은 시간당 임금률과 노동시간의 곱이다. $H = \overline{T} - L$이므로 예산선은 $M = w(\overline{T} - L)$이다.
② O — 세후 순임금은 $(1 - t)w$이다. 여가가 0일 때 전 시간을 노동에 투입하므로 세로축 절편은 $(1 - t)w\overline{T}$이다.
③ O — 여가가 정상재이면 순임금 하락의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고, 실질소득 감소의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린다. 두 효과의 크기에 따라 노동공급은 증가·감소하거나 불변일 수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클 경우 노동공급은 증가한다'이다. 여가가 정상재일 때 대체효과가 더 크면 여가가 순증가하므로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때이다.
⑤ O — 여가가 열등재이면 소득 감소의 소득효과는 여가를 늘려 노동공급을 줄인다. 순임금 하락의 대체효과도 여가를 늘리므로 두 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오답 포인트

④는 대체효과의 방향을 반대로 제시한 선지이다. 순임금이 하락하면 여가가 상대적으로 싸지므로 대체효과는 여가 증가, 즉 노동공급 감소로 나타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세금으로 순임금이 하락했는지 확인한 뒤, 대체효과는 항상 여가 증가·노동 감소로 잡는다. 다음으로 여가가 정상재이면 소득효과가 반대 방향, 열등재이면 같은 방향이라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순임금 하락의 대체효과는 노동 감소이다. 여가가 정상재이면 두 효과가 충돌하고, 열등재이면 둘 다 노동을 감소시킨다.

NoteBase

문 14. 조세와 기업의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기업이 자본재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기회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가속감가상각을 채택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낮춰 투자가 증가한다.

③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조세제도상 투자 유인책의 효과는 커진다.

④ 한계적인 투자계획에서 나오는 세전 실질수익률과 이 투자계획의 재원을 제공한 저축자에게 지급되는 세후 실질수익률이 같으면 한계실효세율은 영(0)이 된다.

⑤ 한계실효세율이 높을수록 투자가 위축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조세가 자본의 사용자비용과 한계실효세율을 통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투자 반응의 크기를 결정하는 사용자비용탄력성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기업이 자본재 한 단위를 일정 기간 보유·사용할 때 부담하는 기회비용이다. 이 비용이 낮아지면 기업이 원하는 자본스톡과 투자는 증가한다.
가속감가상각은 세법상 감가상각 공제를 앞당겨 공제액의 현재가치를 높이므로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낮춘다.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은 사용자비용 변화에 대해 원하는 자본스톡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낸다. 탄력성의 절댓값이 클수록 같은 사용자비용 인하가 더 큰 투자 증가를 일으킨다.
한계실효세율은 한계투자의 세전 실질수익률과 저축자의 세후 실질수익률 사이의 조세 쐐기를 세전 수익률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세전 수익률을 p, 세후 수익률을 s라 하면 $METR = (p - s)/p$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자본재를 보유하면 자금조달비용, 경제적 감가상각 등 자본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므로 사용자비용은 자본 보유·사용의 기회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O. 가속감가상각은 감가상각 공제를 더 이른 시기에 받게 하여 공제액의 현재가치를 높인다. 그 결과 세후 자본사용자비용이 낮아지고 투자가 증가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 투자 유인책의 효과는 커진다"이다. 실제로는 탄력성의 절댓값이 작을수록 사용자비용이 낮아져도 자본스톡의 반응이 작으므로 투자 유인책의 효과가 작아진다. 효과는 탄력성의 절댓값이 클수록 커진다.
④ O. 한계투자의 세전 실질수익률 p와 저축자의 세후 실질수익률 s가 같으면 조세 쐐기 $p - s$가 0이므로 $METR = (p - s)/p = 0$이다.
⑤ O. 한계실효세율이 높을수록 세전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 사이의 조세 쐐기가 커져 한계투자가 충족해야 할 세전 수익률이 높아지므로 투자가 위축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투자 유인책이 사용자비용을 얼마나 낮추는지와, 그 인하에 자본스톡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뒤집은 선지이다.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정책 충격에 대한 수량 반응도 작다는 뜻이므로 효과가 커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조세상 혜택이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올리는지 내리는지를 판단하고, 다음으로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의 절댓값을 확인한다. 사용자비용 하락은 투자를 늘리지만, 같은 하락폭이라도 탄력성의 절댓값이 클 때 투자 증가폭이 더 크다.

암기 포인트

가속감가상각은 사용자비용을 낮추고, 사용자비용탄력성의 절댓값이 클수록 투자 반응은 커진다. $p = s$이면 한계실효세율은 0이다.

NoteBase

문 15. 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화주의자는 경기 침체기보다 호황기에 구축효과가 더 크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② 국채발행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는데, 이로 인해 자본유입이 발생하면 환율이 평가절하되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③ 국채가 전액 시중에서 소화될 경우,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④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⑤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시중에서 소화되는 경우보다 총수요 증대효과가 더 크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정부지출을 국채로 조달할 때 국채의 인수 주체에 따라 이자율, 민간투자, 통화량, 환율 및 경상수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구축효과는 확대재정으로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투자 등 민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국채를 시중이 인수하면 민간자금 수요와 이자율이 상승해 구축효과가 나타나기 쉽다. 반면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본원통화와 통화량이 늘고 이자율 상승이 억제되므로 총수요 확대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인플레이션 위험도 커진다. 개방경제에서는 국내 이자율 상승이 자본유입을 일으키면 국내통화가 평가절상되고 순수출과 경상수지는 악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호황기에는 자원이 충분히 고용되고 민간의 자금수요도 커서 재정확대에 따른 이자율 상승과 민간지출 위축이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통화주의 관점에서는 경기 침체기보다 호황기에 구축효과가 더 크다고 본다.
② X — 틀린 부분은 '환율이 평가절하되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이다. 국내 이자율 상승으로 자본이 유입되면 국내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국내통화가 평가절상된다. 그 결과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므로 순수출과 경상수지는 악화된다. 올바르게는 '자본유입이 발생하면 국내통화가 평가절상되어 경상수지가 악화된다'이다.
③ O — 국채를 시중이 전액 인수하면 민간의 자금이 국채 매입에 사용되고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④ O — 중앙은행의 국채 인수는 본원통화를 공급하여 통화량을 늘린다. 총수요가 확대되고 경제가 생산능력에 가까울수록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⑤ O —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통화공급 증가가 이자율 상승을 억제하여 시중 소화 때보다 민간투자의 구축을 줄인다. 따라서 동일한 정부지출 증가의 총수요 확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자본유입' 이후의 환율 방향을 반대로 연결한 선지이다. 자본유입은 국내통화 수요 증가로 이어지므로 국내통화의 평가절상, 수출 감소, 수입 증가, 경상수지 악화의 순서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국채의 인수 주체를 구분한다. 시중 인수이면 이자율 상승과 민간투자 구축을, 중앙은행 인수이면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 위험을 연결한다. 개방경제의 자본유입이 제시되면 국내통화 평가절상과 경상수지 악화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시중 인수는 이자율 상승·구축효과, 중앙은행 인수는 통화량 증가·물가상승 압력이다. 자본유입은 국내통화 강세와 경상수지 악화이다.

NoteBase

문 16. 공공요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필수품에 대한 램지가격설정은 분배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② 시설용량에 제한이 있는 시설에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한계비용에서 경제적 지대를 차감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해야 효율적이다.

③ 공공요금은 소비과정에서의 효율성은 높여주나 생산과정에서의 효율성 개선과는 무관하다.

④ 공평성의 관점에서 보면 능력원칙에 입각하여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평균비용가격설정은 사회적 최적수준에 비해 과대생산을 유발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램지가격설정, 혼잡가격, 공공요금의 효율성·공평성 기준, 평균비용가격설정의 효과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램지가격설정은 총비용을 충당하면서 후생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재화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혼잡가격은 시설용량이 제한되어 초과수요가 생길 때 한계비용에 희소한 용량의 경제적 지대를 더해 수요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규모의 경제가 있는 자연독점에서는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크므로 평균비용가격은 한계비용가격보다 높고 산출량은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작다.

선지별 해설

① O — 램지가격설정에서는 가격탄력성이 작은 필수품에 높은 가격가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필수품 지출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분배 측면의 문제가 발생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경제적 지대를 차감'한다는 부분이다. 시설용량의 제약으로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경제적 지대인 혼잡요금을 한계비용에 더한 수준으로 가격을 정해야 효율적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생산과정의 효율성 개선과 '무관하다'는 부분이다. 적절한 공공요금은 소비자의 수요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뿐 아니라 생산자가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생산효율성에도 영향을 준다.
④ X — 틀린 표현은 '능력원칙'에 입각한다는 부분이다. 공공서비스의 요금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는 편익에 따라 부담하는 편익원칙이 기본적인 공평성 기준이다. 능력원칙은 소득이나 재산 등 부담 능력에 따라 재원을 부담시키는 조세의 대표적 원칙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과대생산'이다.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크므로 평균비용가격은 사회적 최적가격인 한계비용가격보다 높다. 따라서 평균비용가격설정은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소생산을 유발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용량 제약에서 생기는 경제적 지대의 부호를 뒤집고, ⑤는 평균비용가격의 높은 가격을 과대생산과 연결한 것이 함정이다. 또한 ④에서는 공공요금의 편익원칙과 조세의 능력원칙을 바꾸어 놓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설정의 방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램지가격은 비탄력적 수요일수록 높은 가격가산, 혼잡가격은 한계비용에 경제적 지대를 가산, 규모의 경제 아래 평균비용가격은 한계비용가격보다 높은 가격과 더 적은 산출량으로 이어진다. 공공요금의 부담 기준은 원칙적으로 편익원칙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램지는 비탄력적일수록 높게, 혼잡은 지대를 더하고, 평균비용가격은 사회적 최적보다 적게 생산한다.
공공요금은 편익원칙과 연결된다.

NoteBase

문 17.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지방정부에 재원을 이전하는 교부금의 유형별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공재와 사용재는 정상재이며, 지역주민들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함을 가정한다.)

① 조건부 비대응교부금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공공재 소비와 후생수준이 증가하게 된다.

② 무조건부 교부금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소득감소와 조세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③ 지역주민들의 공공재 소비규모와 후생수준은 교부금의 유형과 관련이 없다.

④ 무조건부 교부금의 경우에는 소득효과로 지역주민들의 공공재의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사용재의 소비는 감소하게 된다.

⑤ 조건부 대응교부금의 경우에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공공재의 소비 증가 여부를 알 수 없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무조건부 교부금, 조건부 비대응교부금, 조건부 대응교부금이 지방정부의 예산제약과 공공재·사용재 소비에 미치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무조건부 교부금은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이전하는 재원으로, 지역주민의 실질소득을 늘리는 소득효과를 낸다. 공공재와 사용재가 모두 정상재이면 두 재화의 소비가 모두 증가한다.
조건부 비대응교부금은 특정 공공서비스에만 사용하도록 하되 지방정부의 자체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교부금이다. 공공재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나 공공재 소비와 후생수준이 증가한다.
조건부 대응교부금은 지방정부가 일정액을 지출할 때 중앙정부가 정해진 비율로 보조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공공재의 상대가격을 낮추므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모두 공공재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조건부 비대응교부금은 지정된 공공재에 사용할 재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공공재가 정상재이고 선호가 강볼록하므로 공공재 소비가 증가하고, 선택 가능한 소비기회가 확대되어 후생수준도 증가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소득감소와 조세부담의 증가'이다. 무조건부 교부금은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늘리므로 실제로는 지역주민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소득효과가 발생하며,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교부금이 아니다.
③ X — 틀린 표현은 '교부금의 유형과 관련이 없다'이다. 실제로는 무조건부·조건부 비대응 교부금은 주로 소득효과를, 조건부 대응교부금은 소득효과와 함께 공공재의 상대가격을 낮추는 대체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공공재 소비규모와 후생효과가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④ X — 틀린 표현은 '사용재의 소비는 감소'이다. 무조건부 교부금은 순수한 소득효과를 일으키며, 공공재와 사용재가 모두 정상재라는 가정에서는 두 재화의 소비가 모두 증가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공공재의 소비 증가 여부를 알 수 없다'이다. 조건부 대응교부금의 소득효과는 정상재인 공공재 소비를 늘리고, 대체효과도 상대적으로 싸진 공공재의 소비를 늘리므로 실제로는 공공재 소비가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소득효과가 한 재화의 소비를 늘리면 다른 재화의 소비가 반드시 줄어든다고 오해하게 만든다. 두 재화가 모두 정상재이면 소득 증가에 따라 둘 다 증가한다. ⑤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방향이 충돌하는 경우처럼 보이게 하지만, 대응교부금에서는 두 효과가 모두 공공재 소비를 늘리는 방향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교부금의 용도 제한 여부와 지방정부의 대응 부담 여부를 확인한다. 무조건부는 소득효과, 조건부 비대응은 지정 용도에 대한 재원 이전, 조건부 대응은 소득효과와 공공재 상대가격 하락에 따른 대체효과로 판단한다. 정상재라는 조건이 있으면 소득효과는 해당 재화의 소비를 늘리는 방향이다.

암기 포인트

무조건부는 소득효과, 비대응은 용도만 제한, 대응은 가격까지 낮춘다. 대응교부금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모두 공공재 소비 증가 방향이다.

NoteBase

문 18.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티부(C. Tiebout)모형은 지방정부에 필요한 재원으로 재산세를 상정하고 있다.

② 분권화로 지역들의 특성이 차별화되고 주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주민들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③ 어떤 한 지역의 공공재 공급이 다른 지역에 경제적 영향을 주는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 공급에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④ 국방이나 우편서비스 등은 외부성과 규모의 경제 등으로 중앙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⑤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받아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앙집권화의 정도가 과대평가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지방분권의 효율성 근거와 한계, 그리고 지방재정 규모로 분권 정도를 측정할 때 생기는 오류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티부 모형: 주민이 선호하는 지방공공재와 조세의 조합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지방공공재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모형이다.
분권의 한계: 지역 간 외부성이 있거나 규모의 경제가 크면 개별 지방정부의 공급보다 중앙정부의 공급·조정이 효율적일 수 있다.
재정분권 측정: 지방정부의 지출 규모가 크더라도 그 재원이 중앙정부 보조금이고 사용에 제약이 있다면 지방정부의 실질적 재정 자율성은 지출 비중만큼 크지 않다.

선지별 해설

① O. 티부 모형은 주민이 지방공공서비스와 조세의 조합을 선택하여 지역 간 이동을 한다고 보며, 지방공공재 재원으로 재산세를 상정한다.
② O. 지역별 공공서비스와 조세의 조합이 차별화되고 주민의 이동이 자유로우면 각자의 선호에 맞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③ O. 한 지역의 공공재가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편익이나 비용을 주는 지역 간 외부성이 존재하면, 개별 지방정부는 그 파급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공공재를 과소 또는 과다 공급할 수 있다.
④ O. 국방이나 우편서비스처럼 편익이 여러 지역에 걸쳐 나타나거나 규모의 경제가 큰 서비스는 중앙정부가 통합하여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⑤ X. 틀린 표현은 '중앙집권화의 정도가 과대평가된다'이다. 중앙정부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지방정부 지출까지 지방정부의 자율적 지출로 간주하면 지방재정의 독립성을 실제보다 크게 보게 된다. 올바르게는 지방분권화의 정도가 과대평가되고, 중앙집권화의 정도는 과소평가된다고 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⑤는 보조금이 중앙정부에서 나온다는 점 때문에 중앙집권이 크게 측정된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측정지표가 지방정부의 지출 비중이라면 보조금 지출도 지방지출로 잡히므로 오히려 지방분권이 실제보다 크게 나타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방정부의 명목상 지출 규모와 실질적 재정 자율성을 구분한다. 중앙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거나 용도가 통제되는 지방지출이 많을수록 지출 비중으로 측정한 지방분권 수준은 과대평가된다.

암기 포인트

보조금 포함 지방지출 비중은 분권을 과대평가하고 집권을 과소평가한다.

NoteBase

문 19.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는 대응교부금이다.

② 국고보조금은 무조건부 교부금이다.

③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이다.

④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가 국고보조금보다 바람직하다.

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조건의 유무, 대응재원 부담 여부, 지방정부의 재량, 재원 성격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일반재원을 보장하기 위해 이전하는 재원으로, 일반적으로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무조건부·비대응 교부금이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사업의 수행을 장려하거나 재정부담을 나누기 위해 용도와 조건을 붙여 지원하는 재원으로, 일반적으로 조건부·대응 교부금의 성격을 가진다.
두 재원 모두 지방정부가 스스로 조달한 자체재원이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는 의존재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대응교부금'이다. 지방교부세는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일정한 대응지출을 요구하지 않는 비대응교부금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무조건부 교부금'이다. 국고보조금은 특정 사업과 용도에 조건이 붙는 조건부 교부금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자체재원'이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이전하는 의존재원이다.
④ O —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특정되지 않아 지방정부가 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용도와 조건이 정해진 국고보조금보다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높이는 데 적합하다.
⑤ X — 틀린 표현은 '재정자립도를 개선'한다는 부분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같은 자체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므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증가는 그 자체로 재정자립도를 높이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지방교부세가 재정자주도와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제한된다고 표현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자율적인 재정운영'과 ⑤의 '재정자립도'를 같은 의미로 보면 틀리기 쉽다. 지방교부세는 사용 재량을 높일 수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이전받는 의존재원이므로 자체재원 비중인 재정자립도를 직접 높이는 재원은 아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용도가 자유롭고 대응재원이 필요 없는지는 지방교부세, 특정 용도와 조건 및 지방비 부담이 결부되는지는 국고보조금으로 판단한다. 이어서 재정자립도는 자체재원 비중, 재정자주도는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비중이라는 구별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지방교부세는 무조건부·비대응·재량, 국고보조금은 조건부·대응·용도 제한이다. 둘 다 의존재원이다.

NoteBase

문 20. 재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상주의 시대의 재정이론은 조세부과의 정당성, 조세수입의 원천 등 조세수입과 관련된 논의가 중심이었다.

② 아담스미스(A. Smith)에 의하면 가격기구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므로 재정의 역할은 치안, 국방 등 최소한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바그너(A. Wagner)는 조세부과에 있어서 재정수입확보 기능뿐만 아니라 누진세율의 적용 등으로 분배과정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사회정책적인 과세원리를 강조하였다.

④ 집단의사결정에 관한 공공선택이론과 공공재의 최적공급에 관한 이론은 빅셀(K. Wicksell)과 파레토(V. Pareto) 등의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⑤ 케인즈(J. M. Keynes)가 제시한 최적조세이론은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조세구조에 관한 이론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재정학의 전개 과정에서 각 시대와 학자가 강조한 재정의 역할 및 대표 이론을 올바르게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중상주의: 국가 재정수입의 확보를 중시하여 조세부과의 정당성과 조세수입의 원천을 주로 논의하였다.
아담 스미스: 시장의 가격기구를 신뢰하고 국가의 역할을 국방·치안 등으로 제한하는 고전학파의 최소국가관을 제시하였다.
바그너: 국가 기능과 재정지출이 확대된다고 보았으며, 누진과세 등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사회정책적 과세를 강조하였다.
빅셀·파레토: 빅셀은 집단적 재정 의사결정과 공공재 공급을, 파레토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최적조세이론: 필요한 세수를 확보한다는 제약 아래 조세로 인한 사회후생 손실과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조세구조를 탐구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중상주의 시대에는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가 중요한 관심사였으므로 조세부과의 정당성과 조세수입의 원천에 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었다.
② O — 아담 스미스는 가격기구에 따른 자원배분을 중시하였고, 정부의 역할을 국방·치안 등 제한된 영역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③ O — 바그너는 조세의 재정수입 확보 기능뿐 아니라 누진과세 등을 통한 분배 개선이라는 사회정책적 기능도 강조하였다.
④ O — 빅셀은 집단적 재정 의사결정과 공공재 공급 논의를 발전시켰고, 파레토의 효율성 기준은 공공재의 최적공급 이론을 전개하는 토대가 되었다.
⑤ X — 틀린 표현은 '케인즈가 제시한'과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이다. 최적조세이론은 케인즈의 이론이 아니며, 대표적으로 램지의 연구와 연결된다. 올바르게는 필요한 세수를 확보한다는 제약 아래 사회후생 손실 또는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조세구조에 관한 이론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⑤는 케인즈라는 유명 학자의 이름과 '조세수입 극대화'라는 그럴듯한 표현을 결합하였다. 그러나 케인즈의 핵심 재정론은 유효수요 관리와 재정정책이며, 최적조세의 목적도 세수 자체의 극대화가 아니라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면서 조세의 왜곡과 후생손실을 줄이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명과 대표 키워드를 먼저 연결한다. 아담 스미스는 최소국가, 바그너는 재정팽창과 사회정책적 과세, 빅셀은 집단적 재정 의사결정, 케인즈는 유효수요와 적극적 재정정책, 램지는 최적조세로 구분한다. 또한 '세수 극대화'와 '주어진 세수 아래 후생손실 최소화'를 구별하면 최적조세 관련 선지를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스미스는 최소국가, 바그너는 재정팽창·분배개선, 빅셀은 집단의사결정, 케인즈는 유효수요, 램지는 최적조세이다.

NoteBase

문 21. 재정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의 자원배분기능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

② 시차문제에 있어서 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이 자동안정장치(built-in stabilizer)에 비해 나은 정책수단이다.

③ 자동안정장치의 정책수단으로는 실업보험제도와 소득세의 누진세제도 등이 있다.

④ 정부가 재정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장실패의 유형으로는 공공재, 외부성 등이 있다.

⑤ 소득분배를 위한 재정투입으로 소득계층 간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개선할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재정의 자원배분·소득분배·경제안정 기능을 구분하고, 경제안정 기능에서 재량적 재정정책과 자동안정장치의 시차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원배분 기능은 공공재·외부성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이다.
소득분배 기능은 조세와 이전지출 등을 통해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개선하는 기능이다.
경제안정 기능은 경기변동, 실업, 물가불안 등을 완화하는 기능이다. 재량적 재정정책은 정부가 상황을 판단하여 세입·세출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정책이고, 자동안정장치는 별도의 정책 결정 없이 경기변동에 따라 조세수입이나 이전지출이 자동으로 변하는 제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공공재 공급이나 외부성 교정과 같은 자원배분 기능은 시장실패를 완화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② X — 틀린 부분은 '재량적 재정정책이 자동안정장치에 비해 나은 정책수단이다'라는 표현이다. 재량적 재정정책은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시간이 걸리지만, 자동안정장치는 별도의 정책 결정 없이 작동하므로 시차 문제에서는 자동안정장치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③ O — 경기침체기에 실업급여 지급이 늘고 누진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가처분소득과 총수요의 감소를 완화한다. 따라서 실업보험제도와 누진소득세제는 대표적인 자동안정장치이다.
④ O — 공공재의 비배제성·비경합성과 외부성으로 인한 사적 비용·편익과 사회적 비용·편익의 차이는 시장실패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부 재정 개입의 근거가 된다.
⑤ O —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와 재정지출은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수평적 공평과, 경제적 능력이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수직적 공평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재량적 재정정책이 경기 상황에 맞추어 정책 강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과 시차상의 우위를 혼동하게 한다. 정책을 새로 결정하고 집행해야 하므로 시차만 비교하면 자동안정장치가 더 신속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장실패 보완’은 자원배분, ‘형평성 개선’은 소득분배, ‘경기변동 완화’는 경제안정 기능으로 분류한다.
경제안정 수단의 시차를 물으면 별도의 입법·정책 결정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재정의 세 기능은 효율·공평·안정이고, 시차에는 재량보다 자동이 유리하다.

NoteBase

문 22.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2인 순수교환경제를 고려하자. 소비자** i**의 효용함수는** $u_i(x_i, y_i) = x_i y_i$**이며(** $i = 1, 2$**), 소비자 1의 초기부존은** $(\bar{x}_1, \bar{y}_1) = (0, 20)$**, 소비자 2의 초기부존은** $(\bar{x}_2, \bar{y}_2) = (40, 10)$**이다. 일반균형배분** $((20, 15), (20, 15))$**에 도달하기 위하여 초기부존을 재배분한다고 할 때 새로운 초기부존** $((\bar{x}_1, \bar{y}_1), (\bar{x}_2, \bar{y}_2))$**으로 적절한 것은?**

① $((10, 16), (30, 14))$

② $((12, 20), (28, 10))$

③ $((14, 16), (26, 14))$

④ $((16, 18), (24, 12))$

⑤ $((28, 9), (12, 22))$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목표 일반균형배분에서 성립하는 상대가격을 구한 뒤, 각 소비자의 새 초기부존 가치가 목표 소비묶음의 가치와 같은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두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동일하게 $u_i = x_i y_i$이고, 목표 배분은 각각 $(20, 15)$이다. 총부존은 $(40, 30)$이므로 재배분 후에도 이를 보존해야 한다. 목표 배분을 수요하도록 각 소비자의 새 초기부존 가치는 목표 소비묶음의 가치와 같아야 한다.

사용할 공식

효용함수 $u_i = x_i y_i$에서 한계대체율은 $MRS_{xy} = MU_x/MU_y = y_i/x_i$이다. 내부해에서는 $MRS_{xy} = p_x/p_y$가 성립한다. 또한 이 효용함수의 소비자는 소득을 두 재화에 절반씩 지출하므로, 목표 소비묶음의 가치와 초기부존의 가치가 같아야 한다.

계산 과정

1. 목표 배분 $(20, 15)$에서 $p_x/p_y = 15/20 = 3/4$이다. $p_y = 1$로 정규화하면 $p_x = 3/4$이다.
2. 각 소비자가 목표 소비묶음 $(20, 15)$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소득은 $(3/4) \times 20 + 1 \times 15 = 30$이다. 두 재화에 대한 지출도 각각 15로 같으므로 효용극대화 조건을 충족한다.
3. 따라서 각 소비자의 새 초기부존 $(\bar{x}_i, \bar{y}_i)$는 $(3/4)\bar{x}_i + \bar{y}_i = 30$을 만족해야 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소비자 1의 부존가치는 (3/4) × 10 + 16 = 23.5, 소비자 2의 부존가치는 (3/4) × 30 + 14 = 36.5로 각각 30이 아니다. 틀린 부존 ((10, 16), (30, 14))을 같은 x재 수량을 유지해 고치면 ((10, 22.5), (30, 7.5))가 된다.
② X. 두 소비자의 부존가치는 각각 (3/4) × 12 + 20 = 29, (3/4) × 28 + 10 = 31로 30이 아니다. 틀린 부존 ((12, 20), (28, 10))을 고치면 ((12, 21), (28, 9))가 된다.
③ X. 두 소비자의 부존가치는 각각 (3/4) × 14 + 16 = 26.5, (3/4) × 26 + 14 = 33.5로 30이 아니다. 틀린 부존 ((14, 16), (26, 14))을 고치면 ((14, 19.5), (26, 10.5))가 된다.
④ O. 두 소비자의 부존가치는 각각 (3/4) × 16 + 18 = 30, (3/4) × 24 + 12 = 30이다. 총부존도 (40, 30)으로 보존되므로 두 소비자 모두 (20, 15)을 수요한다.
⑤ X. 소비자 1의 부존가치는 30이지만 소비자 2의 부존가치는 (3/4) × 12 + 22 = 31이다. 또한 y재 총량이 31이어서 원래 총부존 30을 보존하지 못한다. 틀린 ((28, 9), (12, 22))에서 소비자 2의 y재 22를 21로 고치면 ((28, 9), (12, 21))가 되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오답 포인트

새 초기부존의 총량만 원래 총부존과 같다고 해서 목표 배분이 일반균형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①~③은 총량은 보존하지만 상대가격으로 평가한 개인별 부가 30이 아니다. ⑤는 소비자 1의 부만 확인하면 맞아 보이지만 소비자 2의 부가 31이고 총 y재도 1만큼 늘어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목표 배분의 한계대체율로 상대가격을 구한다. 다음으로 목표 소비묶음의 가치를 계산하고, 각 소비자의 초기부존 가치가 그 값과 같은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새 초기부존의 합이 원래 총부존과 같은지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목표 균형배분을 지지하는 부존 재배분은 '총부존 보존'과 '상대가격으로 평가한 개인별 부의 일치'를 동시에 만족한다.

NoteBase

문 23. 노동(L)과 자본(K)으로 x재와 y재를 생산하는 어느 경제의 생산가능곡선상의 한 점 (x,y)에서 한계변환율은 $MRT_{xy}(x,y)=1$이며, 두 소비자 1과 2의 한계대체율이 $MRS^1(x_1,y_1)=MRS^2(x_2,y_2)=2$인 상황을 고려하자(이 때 $x_1+x_2=x$, $y_1+y_2=y$이다). 현재 상황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 경제의 현재 상황에서 생산 측면의 효율성은 만족된다.
ㄴ. 이 경제의 현재 상황에서 소비 측면의 효율성은 만족된다.
ㄷ. 이 경제는 현재 상황에서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종합적인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생산 효율성, 소비 효율성, 생산과 소비의 종합적 효율성은 서로 다른 조건이며, 마지막 조건까지 충족되어야 경제 전체의 파레토 효율성이 성립한다.

핵심 개념

생산 효율성: 주어진 자원과 기술로 한 재화의 생산을 줄이지 않고 다른 재화의 생산을 늘릴 수 없는 상태이다. 생산점이 생산가능곡선 위에 있으므로 충족된다.
소비 효율성: 재화를 소비자 사이에서 다시 배분해 누구도 불리하게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더 좋게 만들 수 없는 상태이다. 두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이 같으므로 충족된다.
종합적 효율성: 생산물 구성까지 효율적이려면 공통 한계대체율과 한계변환율이 같아야 한다. 즉, $MRS^1=MRS^2=MRT_{xy}$여야 한다. 현재는 공통 MRS가 2이고 MRT_{xy}가 1이므로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생산물 구성을 바꾸고 소비를 조정하는 종합적인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맞지만 ㄴ과 ㄷ도 맞으므로 'ㄱ'만 고른 것이 틀렸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② X — ㄷ은 맞지만 ㄱ과 ㄴ도 맞으므로 'ㄷ'만 고른 것이 틀렸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③ X — ㄱ과 ㄴ은 맞지만 ㄷ을 제외한 것이 틀렸다. $MRS^1 = MRS^2 = 2$와 $MRT_{xy} = 1$이 서로 다르므로 종합적인 파레토 개선도 가능하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④ X — ㄴ과 ㄷ은 맞지만 ㄱ을 제외한 것이 틀렸다. 현재 생산점이 생산가능곡선 위에 있으므로 생산 효율성도 충족된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⑤ O — 생산가능곡선 위의 점이므로 ㄱ이 맞고, 두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이 같으므로 ㄴ이 맞다. 그러나 공통 한계대체율과 한계변환율이 다르므로 생산물 구성의 조정을 통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여 ㄷ도 맞다.

오답 포인트

생산 효율성과 소비 효율성이 각각 충족된다는 사실만 보고 경제 전체도 이미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ㄷ이다. 두 조건이 각각 성립해도 공통 MRS와 MRT가 다르면 생산물 구성이 비효율적이므로 종합적인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점이 생산가능곡선 위인지, 소비자들의 MRS가 서로 같은지, 마지막으로 그 공통 MRS가 MRT와도 같은지를 차례로 확인한다. 앞의 두 조건만 충족되고 마지막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면 생산물 구성의 조정을 통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

암기 포인트

생산은 생산가능곡선 위, 소비는 소비자 간 MRS 일치, 종합은 $MRS = MRT$이다.

NoteBase

문 24. 두 재화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다. 이 소비자의 소득은 60이며, 각 재화의 가격은 $p_x = 2$, $p_y = 3$이라 하자. 이 소비자가 y재만 5단위를 살 수 있는 상품권을 받을 때와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때의 효용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소비점 (x,y)에서 이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은 MRS(x,y)로 나타내기로 한다.)

① 상품권을 받을 때 효용수준이 반드시 더 높다.

② 현금으로 받을 때 효용수준이 반드시 더 높다.

③ 가격이 달라지면, 상품권을 받을 때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다.

④ $MRS(30, 5) = 1$이면, 현금으로 받을 때 반드시 더 높은 효용을 얻는다.

⑤ $MRS(30, 5) = 0.5$이면, 상품권으로 받을 때 반드시 더 높은 효용을 얻는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용도가 제한된 현물급여와 같은 금액의 현금급여가 만드는 예산집합을 비교하고, 상품권 예산선의 굴절점에서 MRS와 가격비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소득은 60이고 가격은 $p_x = 2, p_y = 3$이다. y재 5단위 상품권의 가치는 15이므로 현금으로 받으면 총구매력은 75가 된다. 현금 수령 시 예산선은 $2x + 3y = 75$이다. 상품권 수령 시에는 현금소득으로 살 수 있는 x재가 최대 30단위로 제한되므로 예산선이 (30, 5)에서 굴절된다. 상품권으로 가능한 소비묶음은 같은 금액의 현금으로도 모두 살 수 있으므로 현금의 예산집합이 상품권의 예산집합을 포함한다.

사용할 공식

내부해에서는 $MRS(x, y) = p_x/p_y$이고, 이 문항의 가격비는 $p_x/p_y = 2/3$이다. 굴절점 (30, 5)에서 $MRS > 2/3$이면 x재를 더 늘리는 방향이 효용을 높이지만 상품권 수령자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없다. 반대로 $MRS < 2/3$이면 x재를 줄이고 y재를 늘리는 방향이 유리하며, 그 구간에서는 상품권 예산선과 현금 예산선이 일치한다.

계산 과정

1. 상품권의 금액은 $3 \times 5 = 15$이다.
2. 현금 수령 시 총소득은 $60 + 15 = 75$이고 x절편은 $75/2 = 37.5$, y절편은 $75/3 = 25$이다.
3. 상품권 수령 시 굴절점은 기존 소득 60을 모두 x재에 쓴 $x = 60/2 = 30$과 상품권으로 받은 $y = 5$가 결합된 (30, 5)이다.
4. $MRS(30, 5) = 1 > 2/3$이면 굴절점에서 x재를 늘리고 y재를 줄일수록 효용이 증가한다. 이 이동은 현금 수령자에게만 가능하므로 현금 수령의 효용이 엄격히 더 높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상품권을 받을 때 효용수준이 반드시 더 높다'는 표현이 틀렸다. 상품권의 소비묶음은 현금으로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상품권의 효용은 현금의 효용보다 높을 수 없다. 올바르게는 현금 수령의 효용이 상품권 수령의 효용보다 크거나 같다.
② X — '현금으로 받을 때 효용수준이 반드시 더 높다'에서 '반드시 더 높다'가 틀렸다. 현금 최적점에서 y재를 5단위 이상 소비한다면 그 소비묶음은 상품권으로도 가능하여 두 효용이 같아진다. 올바르게는 현금 수령의 효용이 상품권 수령의 효용보다 낮지 않다.
③ X — '가격이 달라지면 상품권을 받을 때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다'가 틀렸다. 가격이 달라져도 같은 금액의 현금은 상품권으로 가능한 소비를 그대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용도가 제한된 상품권이 현금보다 높은 효용을 줄 수 없다. 올바르게는 가격이 달라져도 현금 수령의 효용이 상품권 수령의 효용보다 크거나 같다.
④ O — $MRS(30, 5) = 1$은 가격비 2/3보다 크다. 따라서 굴절점에서 x재를 늘리고 y재를 줄이는 것이 효용을 높이는데, 현금 수령자는 $x > 30$인 소비묶음을 선택할 수 있지만 상품권 수령자는 선택할 수 없다. 강볼록한 무차별곡선 아래 현금 수령의 최적점이 상품권 수령의 최적점보다 엄격히 높은 효용을 준다.
⑤ X — '상품권으로 받을 때 반드시 더 높은 효용을 얻는다'가 틀렸다. $MRS(30, 5) = 0.5 < 2/3$이면 x재를 줄이고 y재를 늘리는 방향이 유리하고, 이 방향의 예산선은 두 급여 방식에서 동일하다. 올바르게는 두 방식에서 같은 최적 소비묶음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효용수준이 같다.

오답 포인트

현금이 선택권을 더 많이 준다는 사실은 '효용이 항상 엄격히 높다'가 아니라 '효용이 적어도 낮지 않다'는 뜻이다. 엄격한 차이는 현금 최적점이 상품권으로는 선택할 수 없는 $x > 30, y < 5$ 영역에 있을 때만 발생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현금 예산집합이 현물급여 예산집합을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두 예산선의 굴절점에서 MRS와 p_x/p_y를 비교한다. $MRS > p_x/p_y$이면 제한된 재화가 아닌 x재를 더 사고 싶으므로 현금의 효용이 더 높고, $MRS < p_x/p_y$이면 두 예산선이 겹치는 y재 5단위 이상 구간에서 최적점이 정해져 효용이 같다.

암기 포인트

같은 가치라면 현금은 현물급여보다 효용이 낮지 않다. 굴절점에서 제한 밖 소비를 원할 때만 현금의 효용이 엄격히 더 높다.

NoteBase

문 25. 역선택 문제를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카페 주인이 카페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여 아르바이트 직원의 업무 태도를 감시한다.

② 회사가 신규채용 지원자에게 대학 졸업장 제출을 요구한다.

③ 모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책임보험의 가입을 강제한다.

④ 신규채용 지원자가 해당 업무의 자격증을 획득하여 해당 회사에 제출한다.

⑤ 중고차 거래 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중고차에 대한 품질보증을 제공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거래 전에 당사자의 유형이나 품질을 알기 어려워 생기는 역선택과, 거래 후 행동을 관찰하기 어려워 생기는 도덕적 해이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역선택은 정보가 부족한 쪽이 거래 전에 상대방의 유형이나 상품의 품질을 구별하지 못해 불리한 대상이 선택되는 문제이다. 이를 줄이는 대표적 방법은 정보를 가진 쪽의 신호 보내기, 정보를 모르는 쪽의 선별, 품질보증, 의무가입이다.
도덕적 해이는 계약이나 고용관계가 성립한 뒤 상대방의 행동을 완전히 관찰하기 어려워 부주의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나타나는 문제이다. 이를 줄이는 대표적 방법은 감시와 성과연동 유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카페 주인이 CCTV로 이미 고용된 직원의 업무 태도를 감시하는 것은 계약 후 숨은 행동을 통제하는 방안이다. 틀린 부분은 이를 역선택 완화 방안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는 감시 방안이다.
② O — 회사가 졸업장을 요구하면 지원자의 능력이나 성실성을 간접적으로 가려낼 수 있다. 정보가 부족한 회사가 지원자를 선별하여 고용 전 역선택을 줄이는 방안이다.
③ O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을 모든 차량에 강제하면 저위험 운전자가 보험시장에서 빠져나가 고위험자만 남는 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 의무가입으로 보험시장의 역선택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④ O — 지원자가 자격증을 취득해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능력에 관한 정보를 회사에 전달하는 신호 보내기이다. 고용 전 정보비대칭과 역선택을 완화한다.
⑤ O — 중고차 판매자의 품질보증은 판매자가 차량 품질에 자신이 있다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신호이다. 좋은 차와 나쁜 차를 구별하기 어려운 중고차 시장의 역선택을 완화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업무 태도를 감시한다'는 표현이 핵심 함정이다. 감시는 이미 채용한 뒤의 행동을 확인하므로 거래 전 숨은 유형의 문제인 역선택이 아니라 거래 후 숨은 행동의 문제인 도덕적 해이에 대응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보비대칭이 거래 전의 유형·품질에 관한 것이면 역선택으로, 거래 후의 노력·행동에 관한 것이면 도덕적 해이로 판단한다. 졸업장·자격증·보증은 정보를 드러내고, 감시는 사후 행동을 통제한다.

암기 포인트

거래 전 숨은 유형은 역선택, 거래 후 숨은 행동은 도덕적 해이이다. 신호·선별·보증·의무가입은 역선택을 줄이고, 감시는 도덕적 해이를 줄인다.

NoteBase

문 26. 공공재에 대한 두 소비자 1과 2의 수요함수는 각각 $P_1 = 50 - Q$와 $P_2 = 40 - \frac{2}{3}Q$ (단, Q는 공공재 수량)이다. 공공재 한 단위의 생산비는 60으로 일정하다고 하자. 효율적인 공공재 조달을 위한 두 소비자의 부담(P_1과 P_2)은 각각 얼마인가?

① $P_1 = 30, P_2 = 30$

② $P_1 = 32, P_2 = 28$

③ $P_1 = 35, P_2 = 25$

④ $P_1 = 38, P_2 = 22$

⑤ $P_1 = 40, P_2 = 2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조건인 사무엘슨 조건을 이용해 효율적 공급량과 각 소비자의 부담가격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소비자 1의 한계편익은 $P_1 = 50 - Q$, 소비자 2의 한계편익은 $P_2 = 40 - \frac{2}{3}Q$이다. 공공재의 한계비용은 단위당 생산비와 같은 60이다. 구해야 할 값은 동일한 효율적 공공재 수량에서 평가한 두 소비자의 부담가격 P_1과 P_2이다.

사용할 공식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조건은 각 소비자의 한계편익을 수직으로 합한 값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것이다.
$P_1(Q) + P_2(Q) = MC$
공공재는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수량을 소비하므로, 같은 Q에서 두 소비자의 한계지불의사를 더한다.

계산 과정

1. 효율 조건을 세우면 다음과 같다.
$(50 - Q) + \left(40 - \frac{2}{3}Q\right) = 60$
2. 식을 정리하면 $90 - \frac{5}{3}Q = 60$이므로 $Q = 18$이다.
3. 효율적 공급량을 각 수요함수에 대입한다.
$P_1 = 50 - 18 = 32$
$P_2 = 40 - \frac{2}{3} \times 18 = 28$
따라서 두 부담가격은 각각 32와 28이며, 합계는 생산비 60과 일치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P_1 = 30$은 $Q = 20$을 뜻하지만 $P_2 = 30$은 $Q = 15$를 뜻하므로 동일한 공공재 수량에서 나온 부담가격이 아니다. 틀린 표현 $P_1 = 30, P_2 = 30$은 $P_1 = 32, P_2 = 28$로 고쳐야 한다.
② O — 효율적 공급량 $Q = 18$에서 $P_1 = 32, P_2 = 28$이고 두 값의 합도 한계비용 60과 같다.
③ X — $P_1 = 35$는 $Q = 15$, $P_2 = 25$는 $Q = 22.5$를 뜻하므로 같은 수량에 대한 부담가격이 아니다. 틀린 표현 $P_1 = 35, P_2 = 25$는 $P_1 = 32, P_2 = 28$로 고쳐야 한다.
④ X — $P_1 = 38$은 $Q = 12$, $P_2 = 22$는 $Q = 27$을 뜻하므로 같은 수량에 대한 부담가격이 아니다. 틀린 표현 $P_1 = 38, P_2 = 22$는 $P_1 = 32, P_2 = 28$로 고쳐야 한다.
⑤ X — $P_1 = 40$은 $Q = 10$, $P_2 = 20$은 $Q = 30$을 뜻하므로 같은 수량에 대한 부담가격이 아니다. 틀린 표현 $P_1 = 40, P_2 = 20$은 $P_1 = 32, P_2 = 28$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모든 선지는 두 부담의 합이 60이므로 합계만 확인하면 구별할 수 없다. 각 부담가격은 반드시 동일한 효율적 공급량 $Q = 18$에서 두 수요함수로 각각 구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공재 문제에서는 먼저 개인별 한계편익을 수직으로 합해 한계비용과 같게 놓고 효율적 공급량을 구한다. 그 공급량을 각 개인의 수요함수에 다시 대입해 부담가격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공공재의 효율 조건은 동일한 수량에서 $\sum MB_i = MC$이며, 개인별 부담가격의 합은 한계비용과 같다.

NoteBase

문 27. 좁은 골목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집에 각각 살고 있는 A와 B가 골목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가로등이 설치되면 두 사람이 얻는 편익은 각각 30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로등의 설치비용은 50이다. 각 사람은 설치에 대해 찬성(Yes) 또는 반대(No)를 선택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찬성하면 설치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고, 한 사람만 찬성하면 찬성한 사람만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둘 다 반대하면 가로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이 때의 편익은 각각 영(0)이다. 이 문제를 전략형 게임(strategic game)의 관점에서 분석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서로 찬성하는 것이 우월전략균형이다.

② 서로 찬성하는 것이 우월전략균형은 아니지만 내쉬균형이다.

③ 무임승차문제로 인해 이 게임의 내쉬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이 문제는 치킨 게임이므로 누군가 한 사람만 찬성하는 것이 내쉬균형이다.

⑤ 서로 반대하는 것이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상대방의 선택별로 자신의 보수를 계산하여 우월전략과 내쉬균형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가로등이 설치되면 각 사람의 편익은 30이다. 둘 다 찬성하면 각자 비용 25를 부담하고, 한 사람만 찬성하면 찬성한 사람만 비용 50을 부담한다. 둘 다 반대하면 각자의 보수는 0이다.

사용할 공식

각 사람의 순보수는 편익에서 자신이 부담하는 설치비용을 뺀 값이다. 즉, 순보수=편익-자기 부담 비용이다. 상대방의 각 선택에 대해 더 큰 순보수를 주는 자신의 선택을 비교하면 최적반응과 우월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계산 과정

보수는 (A의 보수, B의 보수)로 표시한다.
1. (찬성, 찬성): 각자 $30 - 25 = 5$이므로 보수는 (5, 5)이다.
2. (찬성, 반대): A만 비용을 부담하므로 보수는 (-20, 30)이다.
3. (반대, 찬성): B만 비용을 부담하므로 보수는 (30, -20)이다.
4. (반대, 반대): 설치되지 않으므로 보수는 (0, 0)이다.

상대방이 찬성할 때에는 반대를 선택하면 30으로 찬성의 5보다 크고, 상대방이 반대할 때에도 반대를 선택하면 0으로 찬성의 -20보다 크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에게 반대가 엄격우월전략이며, 유일한 내쉬균형은 (반대, 반대)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서로 찬성하는 것이 우월전략균형'이라는 표현이 틀리다. 상대의 선택과 관계없이 반대의 보수가 더 크므로, 올바르게는 서로 반대하는 것이 우월전략균형이다.
② X. '서로 찬성하는 것이 내쉬균형'이라는 표현이 틀리다. (찬성, 찬성)에서 한 사람이 반대로 바꾸면 자신의 보수가 5에서 30으로 증가하므로 일방적 이탈 유인이 있다. 올바르게는 서로 찬성하는 것은 내쉬균형이 아니다.
③ X. '내쉬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틀리다. 두 사람 모두 반대가 엄격우월전략이므로, 올바르게는 (반대, 반대)가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④ X. '치킨 게임'과 '누군가 한 사람만 찬성하는 것이 내쉬균형'이라는 표현이 틀리다. 한 사람만 찬성한 상태에서 찬성자는 반대로 바꾸면 보수가 -20에서 0으로 증가한다. 올바르게는 비대칭 조합은 내쉬균형이 아니며, 이 게임에서는 반대가 항상 최적반응이다.
⑤ O. 상대방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각자의 최적반응은 반대이므로, 서로 반대하는 것이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오답 포인트

가로등의 총편익 60이 총비용 50보다 크다는 사실만 보고 (찬성, 찬성)을 균형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내쉬균형은 사회 전체의 순편익이 아니라 각 개인이 일방적으로 선택을 바꿀 유인이 있는지로 판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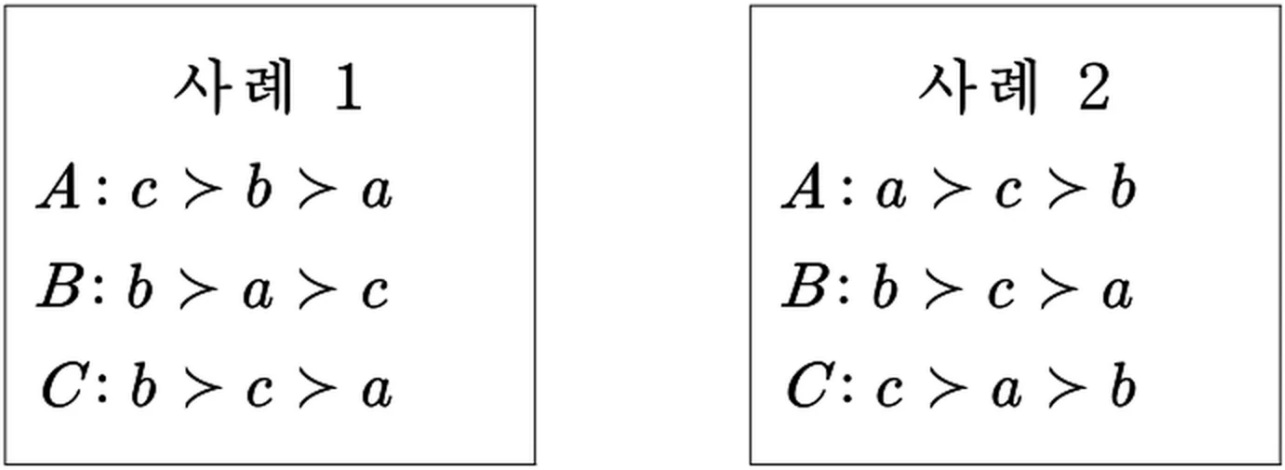
각 전략 조합의 순보수를 먼저 계산한 뒤, 상대방의 선택을 하나씩 고정하여 자신의 최적반응을 비교한다. 모든 경우에 같은 전략이 더 유리하면 그 전략은 엄격우월전략이고, 두 사람의 최적반응이 만나는 조합이 내쉬균형이다.

암기 포인트

사회적으로 설치가 효율적이어도 개인에게 반대가 우월전략이면 가로등은 공급되지 않는다. 이 문항에서는 반대·반대가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NoteBase

문 28. 투표자 A, B, C가 꽁도세(Condorcet) 방식에 따라 다수결로 세 개의 대안 a, b, c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를 다음 두 가지 사례에 각각 적용한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두 사례 모두에서 투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난다.

② 사례 1에서는 투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사례 2에서는 나타난다.

③ 사례 1에서는 투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지만, 사례 2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꽁도세 승자는 사례 1에서는 c이며, 사례 2에서는 a이다.

⑤ 꽁도세 승자는 사례 1에서는 b이며, 사례 2에서는 c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각 사례에서 대안들을 둘씩 대결시켜 사회적 선호가 순환하는지, 그리고 다른 모든 대안을 이기는 꽁도세 승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각 투표자의 선호 순위를 사례별로 나눈다.
2. a 대 b, b 대 c, a 대 c를 각각 일대일로 비교한다.
3. 다수결 결과가 순환하면 투표의 역설이고, 한 대안이 나머지 모든 대안을 이기면 그 대안이 꽁도세 승자이다.

NoteBase

핵심 근거

사례 1에서는 b가 a를 3 대 0으로, c를 2 대 1로 이긴다. 또한 c가 a를 2 대 1로 이기므로 사회적 순위는 $b \succ c \succ a$이고 순환이 없다. 따라서 꽁도세 승자는 b이다.
사례 2에서는 a가 b를 2 대 1로 이기고, c가 a와 b를 각각 2 대 1로 이긴다. 사회적 순위는 $c \succ a \succ b$이고 순환이 없다. 따라서 꽁도세 승자는 c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두 사례 모두 일대일 다수결 결과가 순환하지 않는다. '두 사례 모두에서 투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난다'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두 사례 모두에서 투표의 역설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X — 사례 2에서도 c가 a와 b를 모두 이겨 순환이 없다. '사례 2에서는 나타난다'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사례 1과 사례 2 모두에서 투표의 역설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X — 사례 1에서는 b가 a와 c를 모두 이겨 순환이 없다. '사례 1에서는 투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난다'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두 사례 모두에서 투표의 역설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X — 사례 1의 꽁도세 승자는 c가 아니라 b이고, 사례 2의 꽁도세 승자는 a가 아니라 c이다. 올바르게는 '꽁도세 승자는 사례 1에서는 b이며, 사례 2에서는 c이다'이다.
⑤ O — 사례 1의 b와 사례 2의 c는 각각 다른 두 대안을 일대일 다수결에서 모두 이기므로 꽁도세 승자이다.

오답 포인트

개별 투표자의 선호 순위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투표의 역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투표의 역설은 집단의 일대일 다수결 결과가 $a \succ b$, $b \succ c$, $c \succ a$처럼 순환할 때 발생한다. 이 문항에서는 두 사례 모두 순환 없이 꽁도세 승자가 존재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 대안의 모든 쌍을 비교해 승패를 먼저 적는다. 한 대안이 두 번 모두 이기면 그 대안이 꽁도세 승자이고, 세 대안이 서로 한 번씩 이기며 고리를 이루면 투표의 역설이다.

암기 포인트

모두를 일대일로 이기면 꽁도세 승자, 승패가 고리를 이루면 투표의 역설이다.

NoteBase

문 29. 외부성이 있는 시장에서 사적한계편익은 $PMB = 150 - Q$, 외부한계편익은 $EMB = 30 - \frac{1}{4}Q$이며, 사적한계비용이 $PMC = Q$이라고 하자. 이 시장의 과소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생산자에게 단위당 s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s는 얼마인가? (단, Q는 수량이다.)

① 8

② 9

③ 10

④ 11

⑤ 12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시장에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구하고, 그 생산량을 실현하는 단위당 피구 보조금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사적한계편익은 $PMB = 150 - Q$, 외부한계편익은 $EMB = 30 - \frac{1}{4}Q$, 사적한계비용은 $PMC = Q$이다.
외부한계비용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사회적한계비용은 $SMC = PMC$이고, 사회적한계편익은 $SMB = PMB + EMB$이다.
정부는 생산자에게 단위당 보조금 s를 지급하여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유도한다.

사용할 공식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SMB = SMC$에서 결정된다.
$SMB = (150 - Q) + \left(30 - \frac{1}{4}Q\right) = 180 - \frac{5}{4}Q$
생산자 보조금이 지급되면 시장균형 조건은 $PMB + s = PMC$이므로, 최적 생산량에서 필요한 보조금은 $s = PMC - PMB$이다. 이는 최적 생산량에서의 EMB와도 같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사회적 최적 생산량 Q^*를 구한다.
$180 - \frac{5}{4}Q = Q$
$180 = \frac{9}{4}Q, \qquad Q^* = 80$
2. $Q^* = 80$에서 사적한계편익과 사적한계비용을 계산한다.
$PMB(80) = 150 - 80 = 70, \qquad PMC(80) = 80$
3. 생산자가 $Q^* = 80$을 생산하도록 하는 단위당 보조금을 구한다.
$s = PMC(80) - PMB(80) = 80 - 70 = 10$
또한 $EMB(80) = 30 - \frac{1}{4} \times 80 = 10$이므로 같은 결과가 확인된다.

선지 판단

① X — 계산된 단위당 보조금은 10이므로 8은 작다. 틀린 표현 '8'은 '10'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계산된 단위당 보조금은 10이므로 9는 작다. 틀린 표현 '9'는 '10'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사회적 최적 생산량 $Q^* = 80$에서 $PMC - PMB = 80 - 70 = 10$이므로 옳다.
④ X — 계산된 단위당 보조금은 10이므로 11은 크다. 틀린 표현 '11'은 '10'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계산된 단위당 보조금은 10이므로 12는 크다. 틀린 표현 '12'는 '10'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보조금을 시장 생산량에서 바로 구하거나 외부한계편익의 상수항 30만 보는 것이 함정이다. 먼저 $SMB = SMC$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구한 다음, 그 생산량에서 $s = PMC - PMB = EMB$를 계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의 긍정적 외부성 문제는 '$SMB = PMB + EMB$ 구성 → $SMB = SMC$로 Q^* 계산 → Q^*에서 $s = PMC - PMB$ 계산'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긍정적 외부성의 피구 보조금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외부한계편익이다: $s = EMB(Q^*)$.

NoteBase

문 30. 목장 주인이 방목하는 소들이 이웃 농부의 농작물을 뜯어 먹는 상황을 고려하자. 농작물 피해액은 500만원이며, 소가 농작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목장과 농장 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비용은 600만원이다. 이 상황과 관련하여 코즈정리(Coase theorem)에서 시사하는 민간의 자발적 해결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목장 주인에게 소를 방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농부가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다.

② 농부에게 재산권이 주어진다면, 목장 주인은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다.

③ 해당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든 울타리가 설치된다.

④ 해당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든 울타리는 설치되지 않는다.

⑤ 농부에게 재산권이 주어진다면, 목장 주인은 농부에게 500만원을 피해보상하고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거래비용이 없고 재산권이 명확할 때, 권리의 최초 배분과 관계없이 협상을 통해 사회적 비용이 가장 작은 결과에 도달한다는 코즈 정리를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농작물 피해액은 500만원이고 울타리 설치비는 600만원이다. 울타리를 설치하면 60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피해만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편이 비용이 100만원 더 적다.

핵심 개념

코즈 정리는 거래비용이 없고 재산권이 명확하면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으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한다는 이론이다. 재산권의 최초 귀속은 누가 비용이나 보상금을 부담하는지에는 영향을 주지만, 효율적인 실물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적용 기준

피해를 막는 비용과 피해액을 비교한다. 이 사례에서는 울타리 비용 600만원이 피해액 500만원보다 크므로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다. 목장 주인에게 방목권이 있으면 농부가 피해를 부담하고, 농부에게 재산권이 있으면 목장 주인이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권리 배분에 따른 소득분배만 달라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농부는 500만원의 피해를 피하려고 600만원을 들여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인 '농부가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다'는 '농부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피해를 부담한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 농부에게 재산권이 있더라도 목장 주인은 600만원짜리 울타리보다 500만원의 피해보상을 선택한다. 틀린 표현인 '목장 주인은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다'는 '목장 주인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농부의 피해를 보상한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 어느 쪽에 권리가 있든 600만원의 울타리는 500만원의 피해보다 비용이 크므로 설치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인 '울타리가 설치된다'는 '울타리는 설치되지 않는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 권리의 최초 배분과 관계없이 당사자들은 총비용이 더 작은 결과를 선택하므로 울타리는 설치되지 않는다.
⑤ X — 농부에게 재산권이 있으면 목장 주인은 500만원의 피해를 보상하는 쪽을 선택하며, 보상과 함께 600만원의 울타리까지 설치할 이유가 없다. 틀린 표현인 '피해보상하고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다'는 '피해를 보상하고 울타리는 설치하지 않는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재산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울타리 설치 여부도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코즈 정리에서 권리 배분은 보상과 부담의 귀속을 바꿀 뿐이며, 600만원을 들여 500만원의 피해를 막는 비효율적인 선택은 어느 경우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예방비용과 피해액을 비교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실물 결과를 정한다. 그다음 재산권의 귀속에 따라 누가 피해를 부담하거나 보상하는지만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코즈 정리에서는 권리 배분이 분배는 바꾸지만, 거래비용이 없을 때 효율적 결과는 바꾸지 않는다.

NoteBase

문 31. 사회 A, B, C는 모두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1의 소득(Y_1)이 개인 2의 소득(Y_2)의 4배이다. 사회후생함수가 각각 $SW_A = Y_1 + Y_2$, $SW_B = \min\{Y_1, Y_2\}$, $SW_C = Y_1^{1/2} Y_2^{1/2}$ 이라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 B의 앳킨슨지수는 사회 A보다 높다.

② 사회 C의 앳킨슨지수는 사회 A보다 높다.

③ 사회 B의 앳킨슨지수는 사회 C보다 높다.

④ 균등분배대등소득은 사회 C가 가장 크다.

⑤ 앳킨슨지수로 판단할 때 가장 불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는 B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각 사회후생함수에서 균등분배대등소득을 구한 뒤, 평균소득과 비교하여 앳킨슨지수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개인 2의 소득을 $Y_2 = y$라고 두면 개인 1의 소득은 $Y_1 = 4y$이고, 평균소득은 $\bar{Y} = (4y + y)/2 = 5y/2$이다. 균등분배대등소득 Y_E는 두 사람에게 같은 소득 Y_E를 줄 때의 사회후생이 현재 분배의 사회후생과 같아지게 하는 소득이다.

사용할 공식

앳킨슨지수는 $A = 1 - Y_E/\bar{Y}$이다. 각 사회후생함수에 $Y_1 = Y_2 = Y_E$를 대입한 값과 실제 분배 $(4y, y)$에서의 값을 같게 두어 Y_E를 구한다. 앳킨슨지수가 클수록 균등분배로 바꾸면서도 같은 후생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 손실의 비율이 크므로, 불평등을 더 크게 평가한다.

계산 과정

사회 A: $2Y_E = 4y + y = 5y$이므로 $Y_E = 5y/2$, 따라서 $A_A = 1 - (5y/2)/(5y/2) = 0$이다.
사회 B: $Y_E = \min\{4y, y\} = y$이므로 $A_B = 1 - y/(5y/2) = 3/5$이다.
사회 C: $Y_E = \sqrt{(4y)(y)} = 2y$이므로 $A_C = 1 - 2y/(5y/2) = 1/5$이다.
따라서 균등분배대등소득은 $Y_{E,A} = 5y/2 > Y_{E,C} = 2y > Y_{E,B} = y$이고, 앳킨슨지수는 $A_B = 3/5 > A_C = 1/5 > A_A = 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사회 B의 앳킨슨지수는 3/5, 사회 A의 앳킨슨지수는 0이므로 B가 A보다 높다.
② O. 사회 C의 앳킨슨지수는 1/5, 사회 A의 앳킨슨지수는 0이므로 C가 A보다 높다.
③ O. 사회 B의 앳킨슨지수 3/5는 사회 C의 1/5보다 높다.
④ X. '사회 C가 가장 크다'가 틀린 표현이다. 균등분배대등소득은 사회 A가 $5y/2$로 가장 크고, 사회 C는 $2y$이다. 올바르게는 '균등분배대등소득은 사회 A가 가장 크다'이다.
⑤ O. 앳킨슨지수가 가장 큰 사회는 B이므로, 앳킨슨지수로 판단한 불평등도도 사회 B가 가장 크다.

오답 포인트

균등분배대등소득이 큰 사회와 앳킨슨지수가 큰 사회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평균소득이 동일한 이 문제에서는 $A = 1 - Y_E/\bar{Y}$이므로 균등분배대등소득이 작을수록 앳킨슨지수는 커진다. 따라서 균등분배대등소득은 A가 가장 크지만, 불평등도는 B가 가장 크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실제 평균소득을 구하고, 각 사회후생함수에서 실제 분배의 후생과 균등분배의 후생을 같게 두어 Y_E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A = 1 - Y_E/\bar{Y}$에 대입해 지수의 크기를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평균소득이 같으면 균등분배대등소득은 클수록 평등하고, 앳킨슨지수는 클수록 불평등하다.

NoteBase

문 32. 소득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등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개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② 공리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불균등한 분배상태를 정당화시켜 줄 수도 있다.

③ 롤스(J. Rawls)의 견해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의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최소극대화원칙보다 우선시된다.

④ 러너(A. Lerner)의 동등확률 가정에 따르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달라도 균등분배가 최적이다.

⑤ 노직(R. Nozick)의 견해에 따르면 균등한 분배가 실현된다면 절차의 정당성은 무시될 수 있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득 분배에 관한 평등주의·공리주의와 롤스, 러너, 노직의 핵심 주장을 올바르게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평등주의: 분배의 평등을 중시하지만, 이를 강제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공리주의: 분배 형태 자체보다 사회 구성원들의 효용 총합을 중시하므로, 총효용을 늘린다면 불균등한 분배도 허용할 수 있다.
롤스: 모든 사람의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제1원칙이 최소극대화원칙과 관련된 분배 원칙보다 우선한다.
러너: 각 효용함수가 누구에게 속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 귀속 가능성을 동등하게 보는 동등확률 가정 아래에서는 균등분배가 기대효용을 극대화한다.
노직: 분배 결과의 평등 여부보다 재산의 최초 취득과 이전 절차가 정당했는지를 중시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평등주의적 분배를 강제로 실현하면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평등주의에 제기되는 비판으로 옳다.
② O.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효용 합계를 극대화하는 분배를 선택하므로, 불균등한 분배가 총효용을 더 크게 한다면 그 분배를 정당화할 수 있다.
③ O. 롤스의 원칙에는 우선순위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동일한 자유와 양립하는 동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은 최소극대화원칙과 관련된 분배 원칙보다 우선한다.
④ O. 러너의 동등확률 가정에서는 서로 다른 효용함수가 각 개인에게 귀속될 가능성을 동일하게 본다. 따라서 실제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더라도 사전적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균등분배가 최적이 된다.
⑤ X. 틀린 표현은 '균등한 분배가 실현된다면 절차의 정당성은 무시될 수 있다'이다. 노직은 최종 분배 상태가 균등한지보다 정당한 최초 취득과 자발적 이전을 거쳤는지를 중시하므로, 올바르게는 '균등한 분배가 실현되더라도 절차의 정당성은 무시될 수 없다'이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⑤는 '균등한 분배'라는 결과가 정의로운 절차보다 우선하는 것처럼 서술했다. 그러나 노직의 권리론은 결과의 모양이 아니라 취득과 이전의 역사적 절차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배이론 문항은 판단 기준을 먼저 연결한다. 공리주의는 총효용, 롤스는 기본적 자유의 우선성과 최소수혜자, 러너는 무지와 동등확률에 따른 균등분배, 노직은 정당한 취득·이전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공리주의는 총효용, 롤스는 자유 우선·최소수혜자, 러너는 동등확률·균등분배, 노직은 결과보다 절차이다.

NoteBase

문 33. 앳킨슨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에 가까울수록 분배상태가 불균등함을 의미한다.

② 분배의 불평등성에 대한 명백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다.

③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의 경우 균등분배대등소득이 평균소득보다 작다.

④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다면 균등분배대등소득과 평균소득이 일치한다.

⑤ 동일한 분배상태라도 사회후생함수에 따라 지수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앳킨슨지수의 의미와 균등분배대등소득의 관계, 그리고 사회후생함수에 포함된 불평등회피도의 역할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균등분배대등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했을 때 현재의 불균등한 분배와 동일한 사회후생을 주는 1인당 소득이다. 평균소득을 μ, 균등분배대등소득을 y_e라 하면 앳킨슨지수는 $A = 1 - y_e/\mu$이다. 완전평등이면 $y_e = \mu$이므로 $A = 0$이고,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크다. 지수의 크기는 소득분배뿐 아니라 사회후생함수에 반영된 불평등회피도에도 좌우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앳킨슨지수는 0이면 완전평등을 뜻하고 1에 가까워질수록 균등분배대등소득이 평균소득에 비해 작아지므로 분배가 더 불균등함을 뜻한다.
② O — 앳킨슨지수는 불평등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나타내는 불평등회피도를 사회후생함수에 반영하므로 명시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의 경우 균등분배대등소득이 평균소득보다 작다'이다. 소득의 단순합을 사회후생으로 보는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분배 자체에 가중치를 두지 않으므로, 균등분배대등소득은 평균소득과 일치한다. 올바르게는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의 경우 균등분배대등소득은 평균소득과 같다'이다.
④ O — 완전균등분배에서는 실제로 모두가 평균소득을 받으므로 균등분배대등소득과 평균소득이 일치하고 앳킨슨지수는 0이다.
⑤ O — 같은 소득분배라도 사회후생함수의 불평등회피도가 크면 낮은 소득에 더 큰 비중을 두므로 균등분배대등소득과 앳킨슨지수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일반적으로 불평등을 회피하는 사회후생함수에서는 균등분배대등소득이 평균소득보다 작다는 사실을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에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소득의 단순 합만 보는 경우에는 분배 변화가 사회후생을 바꾸지 않아 두 소득이 일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A = 1 - y_e/\mu$의 관계를 확인한다. 완전평등이면 $y_e = \mu$이고, 불평등회피도가 커질수록 동일한 불균등 분배의 y_e는 작아져 A는 커진다. 다만 분배를 고려하지 않고 소득의 합만 평가하는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에서는 $y_e = \mu$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앳킨슨지수는 평균소득과 균등분배대등소득의 격차이다. 완전평등과 단순합 공리주의에서는 두 소득이 같아 지수가 0이다.

NoteBase

문 34.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한 형태이다.)

ㄱ. 정책 목표가 해당 현물의 소비 증대라면 현금보조보다 현물보조가 더 효과적이다.
ㄴ. 수혜자의 선호를 존중한다면 현물보조보다 현금보조가 더 효과적이다.
ㄷ. 현물보조보다 현금보조의 경우 더 높은 행정 및 운영비용이 발생한다.
ㄹ. 가격보조가 비효율성을 일으키는 원인은 상대가격구조가 변하기 때문이다.
ㅁ. 현금보조의 단점은 부정수급과 바람직하지 않은 상품의 오남용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ㄹ, ㅁ
⑤ ㄴ, ㄷ, ㄹ, ㅁ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현물보조·현금보조·가격보조를 정책목표 달성 효과, 수혜자의 선택권, 행정비용, 상대가격 왜곡의 측면에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현물보조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사용처를 제한하는 방식이고, 현금보조는 수혜자가 받은 현금의 사용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가격보조는 특정 재화의 실질 구매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다.
ㄱ O: 정책목표가 특정 현물의 소비 증대라면 지원 용도가 그 재화로 제한되는 현물보조가 현금보조보다 목표 달성에 더 효과적이다.
ㄴ O: 현금보조는 수혜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소비 묶음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혜자의 선택권과 효용을 더 잘 존중한다.
ㄷ X: 행정 및 운영비용이 더 많이 드는 쪽은 일반적으로 현금보조가 아니라 현물보조이다. 현물보조에는 물품의 조달·보관·운송·배분과 품질 관리 등이 필요하다.
ㄹ O: 가격보조는 보조 대상 재화의 상대가격을 낮춰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므로 비효율성을 일으킬 수 있다.
ㅁ O: 현금은 사용처를 제한하기 어려워 부정수급이나 정책목적과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상품의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옳은 항목은 ㄱ, ㄴ, ㄹ, 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은 틀렸고, 옳은 ㄹ과 ㅁ이 빠져 있다. ㄷ의 '현금보조의 경우 더 높은 행정 및 운영비용'은 '현물보조의 경우 더 높은 행정 및 운영비용'으로 고쳐야 하며,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ㄹ, ㅁ이다.
② X — ㄱ과 ㅁ은 옳지만 ㄷ은 틀렸고, 옳은 ㄴ과 ㄹ이 빠져 있다. 현금보조는 선택권을 더 잘 보장하고, 가격보조는 상대가격을 바꾸어 비효율성을 일으킬 수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ㄹ, ㅁ이다.
③ X — ㄱ, ㄴ, ㄹ은 옳지만 ㄷ은 틀렸고, 옳은 ㅁ이 빠져 있다. 행정 및 운영비용은 일반적으로 현물보조에서 더 높으며, 현금보조에는 부정수급과 바람직하지 않은 상품의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ㄹ, ㅁ이다.
④ O — ㄱ은 특정 현물 소비의 증대, ㄴ은 수혜자의 선택권 존중, ㄹ은 상대가격 왜곡, ㅁ은 현금 사용처 통제의 어려움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틀린 ㄷ만 제외한 조합이다.
⑤ X — ㄴ, ㄹ, ㅁ은 옳지만 ㄷ은 틀렸고, 옳은 ㄱ이 빠져 있다. 특정 현물의 소비 증대가 목표라면 용도가 제한되는 현물보조가 현금보조보다 효과적이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ㄹ, ㅁ이다.

오답 포인트

ㄷ에서 비용의 방향을 뒤집은 것이 핵심 함정이다. 현금 지급은 사용처 통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조달·보관·운송·배분이 필요한 현물보조보다 행정 및 운영비용이 더 높다는 뜻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책목표가 특정 재화의 소비 확대인지, 수혜자의 자유로운 선택인지부터 구분한다. 전자에는 현물보조가, 후자에는 현금보조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어 현물보조는 행정비용, 현금보조는 사용처 통제, 가격보조는 상대가격 왜곡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현물은 목적재 소비와 높은 운영비용, 현금은 선택권과 사용처 통제 문제, 가격보조는 상대가격 왜곡이다.

NoteBase

문 35.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대상이 되는 무소득자의 생계안정과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제도이다.

② 가구의 구성원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혜택을 운영하고 있다.

③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프로그램보다 근로의욕 촉진효과가 더 크다.

④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에서의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⑤ 암묵적 한계세율이 영(0)인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근로장려세제의 수급 대상과 가구유형별 차등 구조, 점증·평탄·점감구간이 노동공급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보전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근로소득이 늘 때 장려금도 늘어나는 점증구간, 장려금이 일정한 평탄구간, 장려금이 줄어드는 점감구간으로 구분한다. 점감구간에서는 추가 근로소득의 일부만큼 장려금이 감소하므로 여가의 기회비용이 낮아져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무소득자'이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제도이며,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의 생계보장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
② X — 틀린 표현은 '가구의 구성원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혜택'이다. 실제로는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등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요건과 지급액 산정구조가 달라진다.
③ O —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등 소득활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점증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도 증가한다. 따라서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공공부조보다 노동시장 참여와 근로의욕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
④ X — 틀린 표현은 '점감구간에서의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는 부분이다. 점감구간에서는 근로소득 증가분의 일부만큼 장려금이 감소하여 실질적인 추가근로 보상이 작아지므로, 대체효과는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이다. 암묵적 한계세율이 0이면 추가 근로의 순보상이 변하지 않아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장려금 수령으로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소득효과만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점감구간에서 장려금 감소로 부족해진 소득을 보충하려는 효과와 대체효과를 혼동하게 한다.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릴 수 있지만, 추가 근로의 보상이 작아지는 대체효과 자체는 노동공급을 줄인다. ⑤에서는 암묵적 한계세율이 0이라는 말이 근로의 한계보상에 변화가 없어 대체효과도 0이라는 뜻임을 잡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무소득자'가 아니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인지 확인한다. 노동공급 효과는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장려금이 늘면 추가 근로의 보상이 커지고, 일정하면 대체효과가 없으며, 줄면 추가 근로의 보상이 작아진다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근로연계·가구별 차등, 점증은 근로보상 증가·평탄은 대체효과 0·점감은 대체효과상 노동공급 감소이다.

NoteBase

문 36. 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S = m - tE$, S: 보조금, m: 기초수당, t: 한계세율, E: 스스로 번 소득)

ㄱ. 재원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초수당을 올리려면 한계세율도 올려야 한다.
ㄴ. 비범주적(noncategorical) 보조금이므로 수혜 대상에 대한 자격심사가 필요 없다.
ㄷ. 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한계세율이 낮을수록 커진다.
ㄹ.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근로의욕은 낮아진다.
ㅁ.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ㄹ, ㅁ
⑤ ㄴ, ㄷ, ㄹ, ㅁ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부의 소득세제에서 기초수당과 한계세율의 관계, 수급 자격, 소득재분배 효과 및 노동공급 효과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부의 소득세제는 소득이 낮을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본인이 번 소득이 늘어날수록 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줄이는 제도이다. 보조금은 $S = m - tE$로 결정되며, m은 소득이 없을 때 받는 기초수당, t는 소득 1원 증가에 따라 보조금이 줄어드는 비율이다. 보조금이 0이 되는 손익분기소득은 $E = m/t$이다.
ㄱ O: 재원이 고정된 상태에서 m을 높이면 최대 보조금 지출이 커지므로, t도 높여 소득 증가에 따라 보조금이 더 빨리 감소하도록 해야 한다.
ㄴ O: 비범주적 보조금은 연령·장애·가구유형 등 특정 범주에 속하는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고 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한다. 소득 신고·확인은 필요하지만 별도의 범주적 자격심사는 필요하지 않다.
ㄷ X: 틀린 표현은 '한계세율이 낮을수록 커진다'이다. 재원이 고정되어 있다면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더 높은 기초수당을 저소득층에 집중할 수 있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진다.
ㄹ O: t가 높아지면 근로소득이 늘 때 보조금이 더 많이 줄어 실질적인 근로 보상이 작아지므로 근로의욕이 낮아진다.
ㅁ O: 여가가 정상재이면 보조금에 따른 소득효과는 여가 수요를 늘리고, 한계세율에 따른 순임금 하락의 대체효과도 노동 대신 여가를 선택하게 하므로 두 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과 ㄴ은 옳지만 ㄹ과 ㅁ도 옳으므로 옳은 진술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ㄹ, ㅁ'이다.
② X: ㄱ은 옳지만 ㄷ은 틀렸고, ㄴ·ㄹ·ㅁ이 빠져 있다. 'ㄱ, ㄷ'이 아니라 'ㄱ, ㄴ, ㄹ, ㅁ'이 옳다.
③ X: ㄴ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렸고, ㄱ과 ㅁ이 빠져 있다. 'ㄴ, ㄷ, ㄹ'이 아니라 'ㄱ, ㄴ, ㄹ, ㅁ'이 옳다.
④ O: ㄱ, ㄴ, ㄹ, ㅁ은 모두 옳고 틀린 ㄷ은 포함하지 않은 조합이다.
⑤ X: ㄴ, ㄹ, ㅁ은 옳지만 ㄷ은 틀렸고 ㄱ이 빠져 있다. 'ㄴ, ㄷ, ㄹ, ㅁ'이 아니라 'ㄱ, ㄴ, ㄹ, ㅁ'이 옳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ㄷ의 '한계세율이 낮을수록'이라는 표현이다. 낮은 한계세율은 근로유인을 덜 훼손하지만, 재원이 고정된 조건에서는 높은 기초수당을 저소득층에 집중하기 어려워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ㄴ의 '자격심사가 필요 없다'는 말은 소득 확인까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특정 범주에 속하는지를 가리는 별도의 자격심사가 없다는 뜻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S = m - tE$에서 m은 보장 수준, t는 보조금 감소 속도라는 점을 확인한다. 재원이 고정되면 높은 m과 높은 t가 연결되고, 노동공급에서는 높은 t가 순임금을 낮춰 대체효과를 일으키며 보조금은 여가가 정상재일 때 소득효과를 통해서도 노동공급을 줄인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고정 재원에서는 기초수당↑·한계세율↑·재분배↑, 한계세율↑이면 근로유인↓이다.

NoteBase

문 37.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 보험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② 재원을 적립방식으로 충당하면 세대 간 공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③ 자산대체효과가 은퇴효과보다 작다면 개인 저축이 증가한다.

④ 국민연금에 의한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⑤ 세대 내의 재분배 문제는 재원조달방식과 무관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국민연금의 강제가입이 보험시장에 미치는 효과,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세대 간 재분배 차이, 그리고 저축·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적립방식은 한 세대가 낸 보험료를 적립하여 그 세대의 장래 급여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반면 부과방식은 현재 근로세대가 낸 보험료로 현재 은퇴세대의 급여를 지급하므로 세대 간 이전이 직접 발생한다.
국민연금은 민간연금과 대체되어 개인저축을 줄이는 자산대체효과와 은퇴기간에 대비한 저축을 늘리는 은퇴효과를 함께 일으킬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국민연금은 강제가입을 통해 위험이 낮은 사람도 가입 집단에 포함하므로, 고위험자만 남아 보험시장이 축소되는 역선택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다.
② X — 틀린 표현은 '적립방식으로 충당하면 세대 간 공평성 문제가 발생한다'이다. 적립방식은 각 세대가 낸 보험료를 그 세대의 급여 재원으로 적립하므로 세대 간 이전과 공평성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다. 세대 간 공평성 문제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현재 근로세대의 부담으로 현재 은퇴세대의 급여를 지급하는 부과방식이다.
③ O — 자산대체효과는 공적연금 자산이 개인저축을 대신하여 저축을 감소시키지만, 은퇴효과는 은퇴기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저축을 증가시킨다. 자산대체효과가 은퇴효과보다 작으면 순효과로 개인저축이 증가한다.
④ O — 국민연금 급여로 생애소득과 연금자산이 늘어나는 소득효과는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⑤ O — 세대 내 재분배는 같은 세대 구성원 사이에서 보험료 부담과 급여 산정 구조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적립방식인지 부과방식인지와 같은 세대 간 재원조달방식 자체와는 구별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세대 간 효과를 뒤바꾼 선지이다. ‘현재 세대의 보험료로 현재 노인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구조가 보이면 부과방식이며, 이때 세대 간 부담과 수익의 차이가 공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금 효과를 시장·세대·개인행동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강제가입은 역선택을 완화하고, 부과방식은 세대 간 이전을 만들며, 개인저축은 자산대체효과와 은퇴효과의 크기를 비교하고, 노동공급은 연금자산 증가의 소득효과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적립은 자기 세대가 쌓고, 부과는 근로세대가 은퇴세대를 부담한다. 저축은 자산대체효과는 감소, 은퇴효과는 증가이다.

NoteBase

문 38.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개입 정도가 국민보건서비스방식보다 강하다.

② 공동보험은 의료서비스 소비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부분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③ 강제보험이므로 민간보험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④ 넓은 의미에서 사회보험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⑤ 조세제도에서 의료비지출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평성과 관련이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국민건강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과 의료보험시장의 역선택·도덕적 해이 완화 장치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민건강보험방식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가입자의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보험방식이며, 정부는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 운영을 규제한다.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은 조세를 주된 재원으로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재원 조달과 공급에 더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이다.
공동보험은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환자가 부담하게 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의 한계비용을 높이는 장치이다. 따라서 보험 가입 후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정부의 개입 정도가 국민보건서비스방식보다 강하다'이다.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은 정부가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고 의료공급에도 직접 관여하므로 정부 개입이 더 강하다. 올바르게는 국민건강보험방식의 정부 개입 정도가 국민보건서비스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해야 한다.
② O — 공동보험은 의료비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게 하므로 의료서비스의 불필요한 이용을 억제한다. 따라서 보험 가입 뒤 나타나는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분적으로 줄일 수 있다.
③ O — 민간보험에서는 건강위험이 높은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강제가입은 건강위험과 무관하게 구성원을 보험에 포함하여 위험집단을 넓히므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④ O —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중심으로 위험을 공동 부담하고 법률에 따라 가입을 강제하는 제도이므로 넓은 의미의 사회보험방식에 해당한다.
⑤ O — 의료비 지출은 개인의 실질적인 담세능력을 낮춘다. 의료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러한 사정을 조세부담에 반영하는 것은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라는 공평성과 관련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사회보험이므로 정부 개입이 가장 강하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강제가입과 정부 규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보건서비스방식보다 개입이 강한 것은 아니다. 조세 재원과 정부의 직접 공급이 결합된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의 개입 정도가 더 강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험료·강제가입·위험분산이 보이면 국민건강보험방식, 조세·정부의 직접 공급이 보이면 국민보건서비스방식으로 구분한다. 보험 가입 전의 가입자 구성 문제는 역선택, 가입 후의 과다 이용 문제는 도덕적 해이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와 강제가입, 국민보건서비스는 조세와 정부의 직접 공급이다. 공동보험은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강제보험은 역선택을 줄인다.

NoteBase

문 39. 정부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몰효과(Baumol effect)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정부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② 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and J. 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는 정부지출의 증가를 용인하는 분위기에 의해서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③ 경기침체 등으로 민간의 한계소비성향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에 의한 국민소득 증가의 크기는 줄어들게 된다.

④ 민간의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정부지출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의 증가분이 정부지출의 증가분보다 크게 된다.

⑤ 브라운-잭슨(C. Brown and P. Jackson)은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크게 되면 정부지출이 증가한다는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을 제기하였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정부지출 증가를 설명하는 이론과 학자를 올바르게 연결하고, 정부지출승수와 한계소비성향의 관계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보몰효과: 노동집약적인 공공서비스 부문은 생산성 향상이 더디지만 임금은 다른 부문을 따라 상승하므로 상대적 생산비용과 정부지출이 증가한다.
피코크-와이즈만: 전쟁이나 사회적 혼란기에 국민이 더 높은 조세부담과 정부지출을 받아들이면서 공공지출 수준이 위로 이동하는 전위효과가 나타난다.
브라운-잭슨: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중심으로 소득, 조세가격, 인구 등의 변화가 정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브레넌-뷰캐넌: 정부를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려는 리바이어던으로 보고 헌법적·제도적 제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보몰효과에 따르면 공공서비스는 노동집약적이어서 생산성 증가가 느린 반면 임금은 경제 전체의 임금 상승을 따라간다.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단위당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여 정부지출이 증가한다.
② O — 피코크-와이즈만의 전위효과에 따르면 전쟁이나 사회적 혼란은 국민이 용인하는 조세부담과 정부지출 수준을 높인다. 혼란이 끝난 뒤에도 지출이 종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③ O — 단순 케인즈 모형의 정부지출승수는 $1/(1-c)$이다. 한계소비성향 c가 작아지면 승수가 작아지므로 동일한 정부지출 증가가 만들어 내는 국민소득 증가분도 줄어든다.
④ O — 통상적인 범위 $0 < c < 1$에서 정부지출승수 $1/(1-c)$는 1보다 크다. 따라서 정부지출 증가분보다 국민소득 증가분이 더 크다.
⑤ X — 틀린 부분은 브라운-잭슨이 리바이어던가설을 제기하였다는 연결이다. 브라운-잭슨은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소득탄력성 등을 통해 정부지출 증가를 설명하지만, 정부를 세입 극대화자로 보는 리바이어던가설은 브레넌-뷰캐넌과 연결된다. 올바르게는 '브라운-잭슨은 중위투표자 모형으로 정부지출 증가를 설명하였다'라고 해야 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⑤는 중위투표자와 소득탄력성이라는 브라운-잭슨의 설명에 리바이어던가설이라는 다른 학자의 이론명을 붙였다. 문장의 앞부분이 맞더라도 마지막 이론명까지 같은 학자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와 대표 키워드를 먼저 짝지어 판단한다. 보몰은 생산성 격차와 비용 상승, 피코크-와이즈만은 사회적 혼란과 전위효과, 브라운-잭슨은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 수요, 브레넌-뷰캐넌은 세입 극대화 정부와 리바이어던으로 연결한다. 승수 선지는 $1/(1-c)$에서 c의 변화 방향을 대입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보몰=비용 상승, 피코크-와이즈만=전위효과, 브라운-잭슨=중위투표자, 브레넌-뷰캐넌=리바이어던이다.

NoteBase